



미국  
코로나19 대응 정책  
종합 보고서

2021. 7.

## 연구진

- 윤성주 재정지출분석센터 센터장
- 구윤모 선임연구원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

I. 개요 .....	1
II. 트럼프 정부 정책 .....	5
III. 바이든 정부 정책 .....	21
IV. 정책 평가 및 향후 전망 .....	32
V. 미국 금융위기 부양정책과 코로나19 대응정책 비교 .....	47

## I. 개요

◇ 본 보고서는 작년(2020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입법된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지원 정책 및 경기 부양책 등 총 6회의 정부 정책을 종합하여 시간 순으로 포함하고 있음

### • 배경

- 미국은 2020년 1월 중순을 기점으로 코로나 확진 사례가 발생한 뒤로 3월 초 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을 지속적으로 넘어섰으며, 이후 한 달 만에 누적 확진자가 25만 명을 넘어서게 됨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
-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이 확산되기 이전인 작년(2020년) 1월 31일 공중보건위기(public health emergency)를 선포<sup>1)</sup>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입국 중단을 시도하기도 하였음
- 하지만, 공중보건위기 선포 당시 이미 누적 확진자가 50명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작년 말(12월 초)에 일 신규 확진자 수가 25만명을 넘어서며 급격한 증가를 보임
-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이행되었으며, 지원책별 규모의 크기는 각각 다르나, 트럼프 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 모두 재정지출 확대 방향을 보이고 있음
- 트럼프 정부에서는 총 5회의 정책이 입법 되었으며, 총 규모는 약 4조달러로 GDP대비 약 19%<sup>2)</sup>
- 바이든 정부에서는 바이든 아젠다인 “American Rescue Plan”이 2021년 3월 10일 의회를 통과하여 법제화되었으며, 총 규모는 약 1.8조달러로 GDP대비 약 8%<sup>3)</sup>
  - \* 바이든 아젠다의 2단계 정책(American Jobs Plan)과 3단계 정책(American Families Plan)은 논의 진행 중

1) National Public Radio, Trump Declares Coronavirus A Public Health Emergency And Restricts Travel from China, 2020.1.31.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20/01/31/801686524/trump-declares-coronavirus-a-public-health-emergency-and-restricts-travel-from-c>

2) IMF, Fiscal Monitor: Database of Country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2021.1. 자료 기준

3) CBO, July 2021 Baseline Forecast - Data Release (Calendar Year), 2021.7.

● 트럼프 정부 정책

美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위원회(CEA, Council of Economic Advisers)에서 2021년 1월 15일 발표한 2020 대통령 경제 보고서<sup>4)</sup>에 따르면, 신속한 재정 투입을 통해 대공황 시절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기록됨

- 트럼프 정부의 공중보건위기 선포 이후, 미국 의회(세출위원회)는 작년 2월 4일 트럼프 정부에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하는 서한 발송을 시작으로 한 달여간의 논의 끝에 코로나19에 대응한 첫 추경(83억달러)을 통과시킴

\* 당시 1차 추경은 의회에서 하원 415:2, 상원 96:1의 초당적 표결을 보이며 통과됨

- 첫 추경 통과(2020.3.5.) 이후,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2차 지원책(1,920억달러)(2020.3.18.)과 3차 지원책(2.2~2.3조달러)(2020.3.27.) 모두 의회를 통과하였음<sup>5)</sup>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첫 추경 통과 후인 3월 13일에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약 500억달러 규모의 연방 재난기금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본 권한을 통해 코로나에 대응한 의료 절차 등이 일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으로 허용되었음<sup>6)</sup>

- 3차 지원책 이후, 총 2회(4차5차 지원)의 지원책이 추가로 의회를 각각 통과하였으며, 이에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19에 대응한 정책 규모는 총 4조달러 규모로 GDP대비 19.1%<sup>7)</sup> 수준을 보였음

- 3차 지원책의 경우, 단일 법안으로는 역대 최고 규모를 기록함<sup>8)</sup>

\* 4차 지원책(Coronavirus Aid Package 3.5): 2020.4.23. 의회 통과

\* 5차 지원책(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 2020.12.21. 의회 통과

4) 美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위원회, *Trump Administration Issues 75th Annual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2021.1.15.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trump-administration-issues-75th-annual-economic-report-president/>

5) 본문에서 언급되는 정책별 규모는 추정치로서 CRFB 또는 CBO의 법안비용추계보고서를 기준으로 함

6)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지출분석센터), 「2020년 3월 제1호 재정동향」, 2020.3.20.

7) IMF, Fiscal Monitor: Database of Country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2021.1. 자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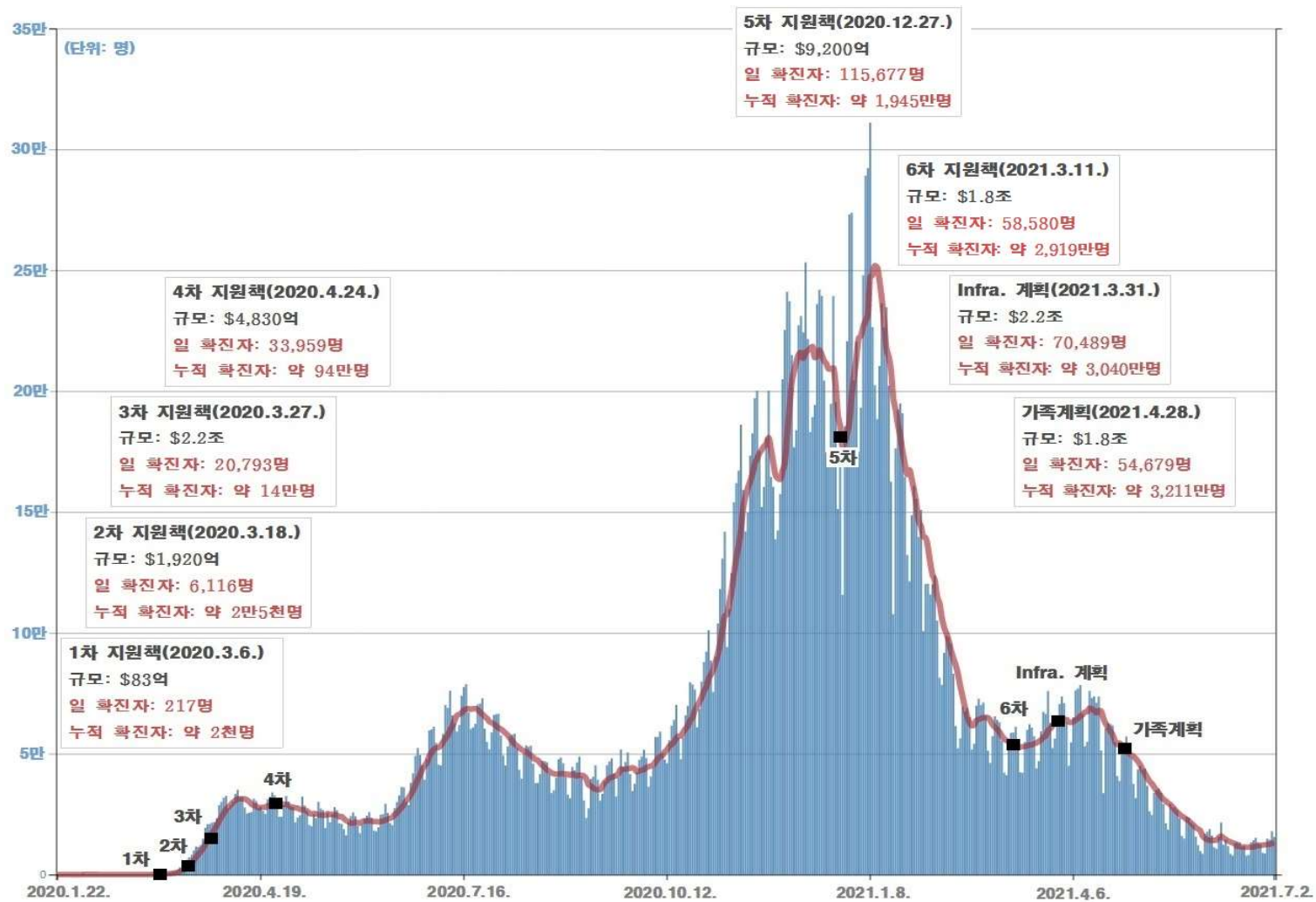
8) Forbes, House Passes \$1.9 Trillion Stimulus Bill - Biden Will Sign It Into Law on Friday, 2021.5.10.

<https://www.forbes.com/sites/sarahhansen/2021/03/10/house-passes-19-trillion-stimulus-bill-biden-will-sign-it-into-law-on-friday/>

## • 바이든 정부 정책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약 2개월 만에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된 바이든 아젠다의 1단계인 ①미국 구조계획법이 통과되었으며, 이후 ②인프라 정책(2단계), ③가족계획(3단계) 순으로 대규모 정책 계획을 발표함

- 2021년 1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아젠다의 첫 입법 결과물인 “American Rescue Plan(이하 미국 구조계획법)”이 의회의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공식 논의가 시작된 지 약 20일 만인 3월 10일 의회를 통과함(규모: 약 1.8조달러)
- 미국 구조계획법 통과 이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바이든 정부는 ① “American Jobs Plan(이하 인프라 계획)”과 ② “American Families Plan(이하 미국 가족계획)”이라는 대규모 정책을 시기의 간격을 두고 각각 발표함
  - (인프라 계획) 3월 31일, 바이든의 펜실베이니아주(피츠버그) 연설을 통해 발표된 인프라 계획의 총 규모는 약 2.2~2.3조달러 수준
    - 현재(2021.6. 기준) 백악관, 민주당, 공화당 간의 사업 규모에 대한 잠정 타결이 이루어졌으나, 추후 재원조달 방식 등에 후속 협상이 진행되면서 수치는 추후 조정될 여지가 있음
  - (미국 가족계획) 4월 28일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미국의 정책 구상을 밝히는 취임 후 첫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joint session of congress)에서 미국 가족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총 규모는 약 1.8조달러로 추정되고 있음
    - \* 미국 가족계획 또한 추후 의회와의 협상 과정 등을 통해 수치는 조정될 수 있음
- 한편, 인프라 계획과 미국 가족계획 발표 시점 중간인 4월 9일에 2022 회계 연도 미국 대통령 예산안이 단년도 재량지출 계획만 포함된 형식으로 발표되었으며, 이후 5월 28일에 의무지출까지 포함된 전체 예산이 공개됨
  - 예산 총량은 6조달러로 전년 추정치 대비 약 17.1% 감소
    - 재량지출(예산권한 기준) 규모는 전년대비 8.4% 증가한 1조 5,224억달러, 의무지출은 전년 추정치 대비 약 23% 감소한 4조 180억달러



자료: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2021.7.5. 접속 기준),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 미 의회예산처(CBO)의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II. 트럼프 정부 정책

「들어가며」

### ■ 당시 코로나 상황

(단위: 명)

구분	'20.3.25.	'20.4.26.	'20.11.6	'20.12.30.
누적 확진자	100,475 (10만명 이상)	1,100,981 (100만명 이상)	10,075,514 (1천만명 이상)	20,129,698 (2천만명 이상)
일 신규 확진자	14,816	27,732	141,737	272,991

자료: 미 질병통제센터(CDC), COVID Data Tracker (2021.7.7. 접속 기준)

### ■ 당시 경제 상황

○ (위기 전) 코로나19 위기 전인 2020년 2월 10일에 발표된 FY2021 대통령 예산안에 따르면 2020년 실질성장률 2.8%, 실업률 3.5% 전망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음

- 특히, 실업률<sup>9)</sup>의 경우 2020년 2월 수치는 최근 50년 중(1969년 이후) 최저치(3.5%)를 기록하는 경제적 호황을 보임<sup>10)</sup>
- 연준(Fed.)에서 발표(2020.1.15.)한 베이지북에서도 당시 전반적인 경제활동 및 고용·임금, 물가 등에 대해서도 완만한 확대 또는 상승 평가를 하며 긍정적인 전망세를 이어가고 있었음<sup>11)</sup>

○ (위기 진행 단계<sup>12)</sup>) 코로나19 발발 직후 발표된 경제 지표는 위기 직전과 발발 직후 수치가 큰 차이를 보였음

- 실업률의 경우 2020년 2월에 3.5%(최근 50년 중 최저치) → 3월에 4.4%로 증가한 후, 1차 유행의 본격적인 영향권 시기였던 4월의 실업률은 1948년 데이터 구축 이후 역대 최고치인 14.7%의 높은 수치를 보이게 됨(5월에는 13.3%로 소폭 하락)
- 연준(Fed.)의 베이지북(아래 표)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월 단위별로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점차 고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베이지북	주요 내용
3월 발표	코로나 바이러스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단기 전망의 위험 요인임
4월 발표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경제활동이 급격히 둔화
5월 발표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경제활동 둔화가 지속됨

- 미 노동부에서 발표한 2020년 실업급여 청구 통계자료<sup>13)</sup>에 따르면, 2020년 3월 3주차(15~21일)의 신규 실업급여 청구자 수가 전주 대비 300만 1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종전 최고치인 69만 5천명(1989.10.2.)을 경신하기에 이룸<sup>14)</sup>
  - 이후, 3월 4주차에는 신규 실업급여 청구자 수가 사상 최고치인 686만명 이상을 기록
  - \* 실업급여 누적 등록자 수(계절조정)는 5월 1주차 최고치(2,491만 2천명, 수정) 이후 하락세<sup>15)</sup>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60% 수준이었던 고용률은 4월에 51.3% → 5월 52.8%로 50% 초반대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하반기) 공중보건 긴급 상황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매년 7월경에 발표되는 대통령 예산안의 수정안(MSR)은 2021 회계연도의 수정 전망<sup>16)</sup>(2020.7.1. 발표)을 기존 방식과 달리 중장기 세입·세출 전망을 생략하는 등 당시 경제의 심각성 및 불확실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미 연준에서 2020년 7월<sup>17)</sup>과 9월<sup>18)</sup>에 발표한 베이지북에 따르면, 2020년 중반 들어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증가했으나 대유행 이전 수준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남
-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경제활동과 고용이 급격한 하락 이후 최근 다소 회복되긴 하였으나 연 초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기준금리 또한 0%대로 지속 동결됨
- 이후 2020년 12월 초에 발표된 베이지북<sup>19)</sup>은 경제 확장 속도가 완만하거나 보통(modest or moderate) 수준을 보였다고 평가하며 경기 악화 현상이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였음<sup>20)</sup>

■ 코로나19 대응 지원 정책 예산 규모 추이(1차 ~ 5차)

- 대규모 지출 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우려보다는 지출 확대 방향
- (1차) 83억달러 → (2차) 1,920억달러 → (3차) 2.2조달러<sup>21)</sup> → (4차) 4,830억달러 → (5차) 9,200억달러

\* (행정명령; 8월 8일) 실업수당 440억달러를 포함하여 총 지원규모는 1,650억달러

■ 정책별 중점 투자 방향

- (1차) 코로나19 위기 본격화 직전 단계로 보건 지출에 치중한 소규모 추경세출 예산으로 구성 →
- (2차) 코로나19 1차 유행 시작 단계로 유급 병가와 가정 의료 휴가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 무료 검사 등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
- (3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무렵 입법된 코로나19 대응 첫 종합경기부양책으로서 중소기업과 가계 지원뿐만 아니라 항공사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은 대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포함
  - 중소기업 지원 주요 정책으로는 고용유지를 위한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중소기업 긴급경제자금융자(EIDL) 프로그램과 함께 대기업 지원을 위한 대출·대출 보증 및 항공사 등에 대한 고용유지 보조금 등이 포함됨
  - 가계 지원 정책으로는 첫 재난 지원금 및 실업급여 확대 예산이 포함됨
- (4차) 3차 지원책에서 도입된 급여보호 프로그램 추가 확대, 그리고 긴급경제 자금융자 예산도 재차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편성함
- (5차) 코로나19 3차 유행이 절정을 향하던 시점인 2020년 12월 말에 입법된 정책으로서 고용유지를 위한 중소기업 및 항공(교통)업계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트럼프 정부의 2차 종합경기부양책의 성격을 보이고 있음
  - 이 외에 실업수당 재차 확대, 2차 재난지원금 포함, 그리고 교육 관련 보조금이 크게 확대됨

■ 의회 당시 상황 (지속적인 대치 국면, 탄핵 종료시기와 겹침)

- 당시 지원책 입안 당시에는 몇몇 항목별(주·지방 정부 지원, 추가 재난지원금 규모, 중소기업 지원 등)로 양당이 이견을 보이는 등 대치국면도 있었음
- 하지만, 긴급했던 당시 상황에 따라 모든 지원책들이 대부분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신속히 통과된 측면이 있음
- 한편, 작년 초 의회 민주당의 주도하에 진행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2020.1.21.에 상원에서 본격적인 심리를 착수 하였는바, 이로 인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음

\* 탄핵소추안이 상원에서 최종 부결된 2020년 2월 5일까지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600명 이상<sup>22)</sup>을 기록함<sup>23)</sup>

9) 美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위원회(CEA), Trump Administration Issues 75th Annual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2021.1.15.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briefings-statements/trump-administration-issues-75th-annual-economic-report-president/>

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지출분석센터), 「2020년 2월 2호 재정동향」, 2020.3.9.  
 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지출분석센터), 「2020년 1월 1호 재정동향」, 2020.1.17.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지출분석센터), 『2020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20.10.21.  
 13) 美 노동부, Unemployment Insurance Weekly Claims, 각 주간 자료. [https://oui.doleta.gov/unemploy/claims\\_arch.asp](https://oui.doleta.gov/unemploy/claims_arch.asp)  
 1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지출분석센터), 「2020년 3월 2호 재정동향」, 2020.4.6.  
 15) 각 실업 관련 수치들은 2021년 6월 말 접속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한 수치이며, 이후 노동 통계국의 데이터 수치 조정 작업을 통해 규모는 변화할 수 있음  
 16) OMB,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07/21msr.pdf>  
 17) Fed, Beige Book, 2020.7.15.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beigebook202007.htm>  
 18) Fed, Beige Book, 2020.9.2.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beigebook202009.htm>  
 19) Fed, Beige Book, 2020.12.2.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beigebook202012.htm>  
 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지출분석센터), 『2020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21.4.20.  
 21) 연준의 긴급대출제도(facility) 규모(약 4,500억달러)를 제외할 경우, 약 1.7조달러 수준  
 22) 美 질병통제예방센터(CDC), 2021년 7월 5일 접속 기준, [https://covid.cdc.gov/covid-data-tracker/#trends\\_dailytrendscases](https://covid.cdc.gov/covid-data-tracker/#trends_dailytrendscases)  
 23) 의회 상원,

[https://www.senate.gov/legislative/LIS/roll\\_call\\_lists/roll\\_call\\_vote\\_cfm.cfm?congress=116&session=2&vote=00033](https://www.senate.gov/legislative/LIS/roll_call_lists/roll_call_vote_cfm.cfm?congress=116&session=2&vote=00033)

[https://www.senate.gov/legislative/LIS/roll\\_call\\_lists/roll\\_call\\_vote\\_cfm.cfm?congress=116&session=2&vote=00034](https://www.senate.gov/legislative/LIS/roll_call_lists/roll_call_vote_cfm.cfm?congress=116&session=2&vote=00034)

● **1차 지원책** 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020

(H.R. 6074; P.L. 116-123) - 2020.3.6. 입법 발효

■ (총 규모)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첫 대응 정책인 1차 추경세출예산의 규모는 약 83억달러<sup>24)</sup>로 실질적인 논의는 한 달여 정도가 걸렸으나, 법안이 공식 발의되고 나서부터는 빠른 속도로 의회를 통과함

\* 동 추경 안은 법안 당일에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결(415:2)로 가결되었으며, 상원 또한 90표 이상의 찬성표를 보이면서 법안 발의 3일 만에 의회를 최종 통과함

■ (주요 내용) 1차 지원책은 크게 국내 예산과 해외 대응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표 1>과 같이 지원 내용(백신 연구, 주·지방정부 공중보건 기관 및 조직에 대한 보조금 등)의 대부분이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보건 분야 중심의 국내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특징임

○ 해외 대응 예산으로는, 해외에 상주해 있는 외교기관 운영, 대피 및 구호(aid) 등을 위해 1차 지원책 전체 예산의 약 15%가 배정되어 있음

○ 또한, 백신 연구 및 치료제 개발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이 1차 지원책에서 시작되었음

<표 1> 코로나 대응 1차 추경예산 내역

(단위: 억달러)

구분	예산
백신/시험(testing)/기타 치료제 개발 연구	31
질병예방통제센터 (주·지방정부 포함)	22
보건 예방, 의료품, 지역 보건 센터 등	10
대피 및 구호(aid) 등 해외 보건 대응	12.5
의료 전문의의 원격 의료 지원	5
기타 지출	2
합계	83

출처: CRFB, Lawmakers Release Emergency Funding Request on Coronavirus, 2020.3.4.

24) CBO, *CBO Estimate for H.R. 6074, the 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020, as posted on March 4, 2020*, 2020.3.4. <https://www.cbo.gov/system/files/2020-03/hr6074.pdf>

● **2차 지원책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H.R. 6201; P.L. 116-127) - 2020.3.18. 입법 발효

- (총 규모) 1차 추경예산이 의회를 최종 통과한 후, 이틀 만에 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일 신규 확진자 수가 6,000명을 넘어선 당일 의회는 약 1,92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2차 지원책을 가결함

\* 동 법안은 의회 발의 3일 만에 1차 추경예산 때와 같이 하원에서 높은 찬성 표결로 가결되었으며, 이후 상원에서도 4일 만에 높은 찬성률을 보이며 발의 7일 만에 의회를 최종 통과함

- 예산의 구성<sup>25)</sup>은 ①긴급지출로 구성되어 있는 재량지출(추경)예산 24억달러, ②실업수당, 긴급 유급 병가, 아동 영양 및 식량지원 프로그램(SNAP<sup>26)</sup>) 등에 대한 의 무지출 증가분 950억달러, ③유급 병가, 가정 의료 휴가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포함 된 세입 감소 분 940억달러로 구분됨

- (주요 내용<sup>27)</sup>) 2차 지원책은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비용 무료 지원과 실업급여 확대를 포함하여 가정 의료 유급 휴가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tax credit) 예산이 비중 있게 포함된 것이 특징임 <표 2>

- 코로나19 검사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검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약 86억달러 규모의 무료 검사에 대한 예산이 배정됨

- 유급 병가<sup>28)</sup>(Paid Sick Leave)는 종업원대상: 종업원 500인 미만 고용주 및 정부 고용주의 종업원 등들에게 2주간의 휴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코로나19 증상자 또는 자가 격리 권고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병가는 하루 최대 511달러, 피고용인의 자녀 돌봄 등으로 인한 병가는 하루 최대 200달러 지급

\* 유급 병가 및 가정 의료 유급 휴가의 경우, 2차 지원책 전체 예산의 반 이상(1,050억달러)을 차지 하고 있으며, 메이크아이드 지원 확대 예산(약 500억달러)과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비용(약 86억달러)의 순위로 이어지고 있음

- 가정 의료 휴가(최대 12주)요건을 갖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하루 최대 200달러<sup>29)</sup>, 총

25) CBO, *CBO Estimate for H.R. 6201,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enacted as Public Law 116-127 on March 18, 2020*, 2020.4.2. <https://www.cbo.gov/publication/56316>

26)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27)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지출분석센터), 『2020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20.10.21.

28) 정부의 격리 조치 및 보건 전문가로부터의 자가 격리 권고, 자녀의 학교 휴교 및 보육 서비스 중지 등의 이유로 인해 휴가를 쓰는 경우 등을 포함

1만달러 최대)에 대해 고용주(종업원 500인 미만)에게 관련 금액 100% 급여세액 공제

- 2차 지원책은 긴급 실업수당<sup>30)</sup>을 도입하여 주(states)에 최대 10억달러의 실업 관련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또한, 실업률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등의 특정 요건에 부합하는 주의 경우 각 요건에 따라 노동부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의 50%, 또는 10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표 2> 코로나 대응 2차 지원책 예산내역

(단위: 억달러)	
구분	예산
유급 병가 및 가정 의료 휴가 지원	1,050
메디케이드 예산 확대	500
영양, 식량지원 프로그램 확대	185
코로나 검사비용 무료 지원 등	86
주정부에 긴급실업지원 보조금 등 실업 관련 지원	47
기타 지출	51
합계	1,920

출처: CRFB,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will Cost \$192 Billion , 2020.4.6.

● **3차 지원책 CARES Act –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H.R. 748; P.L. 116-136) – 2020.3.27. 입법 발효

- (총 규모) 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2차 지원책이 의회를 통과한지 약 10일 만에 의회는 2.2조달러 규모의 종합경기부양책 성격의 대규모 지원책을 통과 의결<sup>31)</sup>함

\* 2차 지원책이 의회를 최종 통과할 시점(2020.3.18.)에는 일 확진자 수가 이미 급격히 증가하여 누적 확진자 수가 약 25,000명을 기록하였으며, 3차 지원책이 의회에서 공식 논의가 시작(2020.3.20.)되고 이틀 만에 일 신규 확진자 수는 1만명을 넘어서게 됨

- CBO에서 발표(2020.4.27.)한 법안 비용 분석 보고서<sup>32)</sup>에 의하면, 지출, 세금 감소

29) 공중보건긴급휴가(public health emergency leave)로 인한 첫 2주(10days) 기간은 제외하고 이후부터 지급

30) 미 노동부, 'Unemployment Insurance Relief during COVID-19 Outbreak', 접속일자(2021.6.24.)

<https://www.dol.gov/coronavirus/unemployment-insurance#fact-sheets>

31) 구두투표로 의결됨(agreed by voice vote)

및 면제(tax breaks), 보증금, 기타 지출 등으로 인한 3차 지원책의 향후 10년간 (2020~2030) 총 비용은 2조달러 이상이며, 이중 실제 재정적자에 영향을 주는 순 재정적자 효과\*는 약 1.7조달러로 집계됨

\* 3차 지원법은 연준(Fed.)의 긴급대출제도(emergency lending facilities)에 소요되는 의무지출인 4,540억달러 규모의 대출보증금을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지원 지출에 대한 향후 수입이 지출을 대부분 상쇄(roughly offset)할 것으로 분석한 결과임

- 예산의 구성은 ①연방재난관리청<sup>33)</sup> 재난지원자금(Disaster Relief Fund) 등 긴급지출 성격의 추경세출(discretionary)예산 3,260억달러, ②연준(Fed.)의 대출보증(4,540억달러)과 실업수당 확대 예산 등이 포함된 의무지출 증가분 약 1.5조달러, ③재난지원금, 세금 유예, 학자금 상환 유예 등으로 인한 세입 감소분 4,080억달러로 구분됨

■ (주요 내용) 3차 지원책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발발 이후의 첫 종합 경기부양책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한 첫 재난지원금(recovery rebates<sup>34)</sup>)과 함께 중소기업 등의 고용유지를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규정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은 물론 코로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화물/여객 항공사 등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대출보증을 포함한 것이 특징임

- 재난지원금은 1회성 지원으로 성인 1인당 최대 수령 금액이 1,200달러(부부합산: 2,400달러)이며, 부양 자녀(17세 미만)는 1인당 500달러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소득 요건에 따른 선별적 지원 체계를 따름

\* 조정총소득금액이 75,000달러(세대주의 경우 112,500달러, 부부합산의 경우 15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 100달러당 5%(\$5)씩 수혜 금액이 감소함<sup>35)</sup>

- 실업급여<sup>36)</sup>의 경우, 급여 지급 시 모든 실업수당에 600달러씩 추가로 지급(FPUC<sup>37)</sup>)하도록 함(추가 지급 기간: 2020년 7월 31일까지)<sup>38)</sup>

32) CBO, 'H.R. 748, CARES Act, Public Law 116-136, 2020.4.16.(Revised April 27, 2020)  
<https://www.cbo.gov/system/files/2020-04/hr748.pdf>

33) 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34) refundable tax credits

35) Tax Foundation, Congress Approves Economic Relief Plan for Individuals and Businesses, 2020.3.30.  
<https://taxfoundation.org/cares-act-senate-coronavirus-bill-economic-relief-plan/>

36) Investopedia, 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FPUC) and How to Apply, 2021.6.20.  
<https://www.investopedia.com/federal-pandemic-unemployment-compensation-fpuc-definition-4802039>

37) 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

Coronavirus Response and Relief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P.L. 116-260 ) 조항 참고

38) 美 노동부, Unemployment Insurance Relief During COVID-19 Outbreak, (검색 일자: 2021.7.12.)  
<https://www.dol.gov/coronavirus/unemployment-insurance>

- 한편, 자영업자, 독립 계약자, 임시직업 구직자 또는 정규실업 수당의 미혜택자들을 대상으로 39주간 별도의 대유행 실업지원(PUA<sup>39)</sup>)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정책 이행: 2020.12.31.까지)
  - \* PUA 급여액은 각 주의 실업보험 법에 따라 다양하게 측정됨
- 추가적으로, 대유행 긴급 실업수당(PEUC; 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Assistance)을 통해 정규실업급여를 소진한 상태에서 특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13주를 연장하여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정책 이행: 2020.12.31.까지)
-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은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저리 대출상품의 성격을 갖고 있음
  - 동 제도의 특징은 대출 승인 후, 기업이 8주 동안 급여 관련 항목(임금, 가정 의료 휴가, 병가 등 포함)에 대해 지출하였을 경우 전액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임
  - \* 동 제도는 참고(16페이지)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제도의 변화가 있었음
-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여객/화물 항공사 등을 중심으로 항공 관련 업체 등이 2020년 9월 30일까지 급여 삭감 방지 및 고용 유지 등 특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약 320억달러)받을 수 있도록 함
  - \* 여객항공사(\$250억) 및 화물항공사(\$40억) 등에 대해 약 290억달러 규모의 대출 지원 예산도 편성(관련 계약 업체 등 \$30억 지원)되었으며, 대출 또는 대출보증 수령인은 직원의 10%를 초과 (2020년 3월 24일 기준)하여 감원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특정 요건을 따라야 함
  - 위의 보조금과는 별개로, 여객 항공사, 화물 항공사, 또는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대규모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한편, 3차 지원입법을 근거로 코로나19에 대응한 연준(Fed.)의 긴급 자금대출제도 (facility)를 통해 유동성 공급 지원이 가능해짐(규모 약 4,540억달러)
  - \* 3차 지원입법에서 규정한 긴급 자금대출제도는 MLF(지방정부 기능 유지를 위한 직접 대출 지원), PPPLF(중소기업청의 소기업 대출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MSFLF(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채권 매입)로 구성<sup>40)</sup>
- 교육 관련한 주요 정책으로는 교육부 소관의 학자금 대출<sup>41)</sup> 상환을 2020년 9월 30일까지(6개월) 유예하였고, 유예기간 발생하는 이자 또한 적용하지 않기로 함

39)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40) 한국은행 위싱턴 주재원,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연준이 도입한 긴급대출제도 비교 및 시사점」, 2020.5.4.

41) ① Federal Direct Loans ② Federal Family Education Loans

- 사회보장급여세(Payroll Taxes)의 경우 CARES법에 근거하여 고용주에 부과하는 세금을 2020년 말(~2020.12.31.)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함<sup>42)</sup>

**<참고> 사회보험 급여세(Social Insurance Payroll Tax<sup>43)</sup>)**

- ◇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급여세율은 현재 7.65%  
: 사회보장(Social Security) 급여세: 6.2%  
: 메디케어(Medicare Hospital Insurance) 급여세: 1.45%
- ◇ 종업원도 고용주와 같은 비율로 납부하고 있으며, 고용주와 종업원의 납부세율을 합할 경우 총 급여세율은 15.3%
- ◇ 한편, 사회보험 급여세는 오바마 정부에서 2010년에 인하된 바 있음<sup>44)</sup>
  - 2010년 12월 17일에 제정된 감세연장법(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 of 2010)에서 피고용인(employees)에게 부담하는 사회보장급여세를 1년간(2011년) 2%p 인하된 4.2% 적용

**<표 3> 코로나 대응 3차 지원책 예산내역**

(단위: 억달러)

구분	예산
대기업 대출 및 대출보증 (연준의 긴급자금 대출제도 \$4,540억 포함)	5,100
중소기업 대출보증 및 보조금(PPP \$3,490억 포함)	3,770
재난지원금(recovery rebates)	2,930
실업수당 확대 및 연장	2,680
주 및 지방정부 지원	1,500
보건 관련(health-related) 지원	1,530
항공사 고용유지 보조금 및 공공소유 상업 공항 <sup>45)</sup> 보조금 지원 등	710
연방재난관리청 예산	450
주택(housing) 및 영양(nutrition) 등 사회안전망 지원	420
교육 관련(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80억 포함)	400
기타	150
개인소득세 및 기업 세금 감면	2,610
합계	약 2.2조달러

출처: CRFB, What's in the \$2 Trillion Coronavirus Relief Package?, 2020.3.25.

42) Cares Act, Division A - Title 1 - Subtitle C - Section. 2302(Delay of payment of employer payroll taxes)

43) 미 국세청(IRS), <https://www.irs.gov/taxtopics/tc751> (2021.7.8. 접속)

44) Tax Policy Center, <https://www.taxpolicycenter.org/briefing-book/what-did-2008-10-tax-stimulus-acts-do>

45) publicly-owned commercial airports

● **4차 지원책 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 and Health Care Enhancement Act**

(H.R. 266; P.L. 116-139) - 2020.4.24. 입법 발효

■ (총 규모) 4차 지원책의 총 규모는 약 4,830억달러로 트럼프 정부에서 통과된 코로나 19대응 입법지원책 중 3번째로 큰 규모를 보이고 있음

- \* 동 법안은 법안이 발의(2020.4.21.)된 지 3일 만에 의회를 최종 통과(2020.4.23.)함
- \* 4차 지원책이 의회에 발의된 시점의 일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5천명 수준이었으나, 의회를 최종 통과할 시점(2020.4.23.)에는 약 3만 2천명(누적 확진자: 90만명 이상)으로 증가함

○ 예산<sup>46)</sup>의 구성은 당해 연도(2020)에 지출될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으로 인한 의무 지출 증가분 3,213억달러 및 노동, 보건, 복지, 교육, 금융 분야에 배정된 재량지출 증가분 1,621억달러(이 중 750억달러는 추정예산)로 구성

■ (주요 내용) 4차 지원책은 3차 지원책을 바탕으로 직원 고용유지를 위한 PPP예산을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긴급경제자금융자(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를 통한 대출 지원 및 보조금 등을 확대하였음

- \* CARES Act(3차 지원책)에서 도입한 PPP 자금은 해당 입법 발효 후 몇 주 만에 자금이 소진됨에 따라 4차 지원책을 통해 추가 자금이 배정됨

○ 또한, 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해 보건업계 종사자(health care providers)들의 예방·대응 체계 지원을 위해 약 750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배정함

〈표 4〉 코로나 대응 4차 지원책 예산내역

(단위: 억달러)	
구분	예산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예산 확대	3,210
보건업계 종사자 예방/대응 지원	750
코로나19 검사 긴급자금	250
긴급경제자금융자(EIDL) 및 보조금 <sup>47)</sup>	600
기타 중소기업청(SBA) 관련 예산	20
합계	4,830

출처: CRFB, What's in the Fourth Coronavirus Package, 2020.4.22.

46) CBO, 'CBO Estimate for H.R. 266, Paycheck Protection Program and Health Care Enhancement Act', 2020.4.22. <https://www.cbo.gov/publication/56338>

47) IMF, Fiscal Monitor: Database of Country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2021.6. 자료 기준

**<참고> Paycheck Protection Program Flexibility Act of 2020**

H.R. 7010 / P.L. 116-142

- ◇ 3차 지원책(2020.3.27.)과 4차 지원책(2020.4.24.)을 거치면서 총 약 6,700억달러의 자금이 배정된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은 이후 2020년 6월 5일에 "Paycheck Protection Program Flexibility Act of 2020"가 입법되면서 주요 내용이 개정됨
  - 대출금 사용 기한(기존 8주 → 24주)(= 2020.12.31.까지) 확대
  - 급여성 지출 의무 비중 하향 조정(기존 75% → 60%)
  - 비급여성 의무 지출 비중 완화(기존 25% → 40%)
  - 직원 재고용 시점 연장(기존 6월 30일 → 12월 31일) 등 대출금 탕감(forgiveness) 요건이 전반적으로 완화됨
- ◇ 급여보호 프로그램은 이후 후술하는 5차 지원책과 6차 지원책을 통해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대됨

● **5차 지원책 Coronavirus Response and Relief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H.R. 133; P.L. 116-260) - 2020.12.27. 입법 발효

- (총 규모) 4차 지원책 입법 이후 약 8개월만에 통과된 트럼프 정부의 마지막 코로나19 대응 입법 지원책인 5차 지원책의 총 규모는 약 9,200억달러 수준임

\* 4차 지원책이 의회에서 통과되던 시점(2020.12.21.)에는 일 확진자 수가 20만명 전후를 넘나들며 3차 유행이 지속적인 흐름을 타고 있던 시기였음(누적 확진자: 1,200만명 이상)

**<참고> 5차 지원책의 구성과 형식**

- ◇ 5차 지원책은 2021 회계연도 정규세출예산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안에 포함되어 의회를 통과함
- ◇ 'H.R. 133'은 ①정규세출예산, ②코로나 대응 및 완화를 위한 추경세출예산, ③코로나 대응 추가 자금, ④기타 등 크게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 2021 회계연도 통합 정규세출예산은 12개(Division A~L)의 세출분야 예산을 각 Division 항목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며 규모는 약 1.4조달러<sup>48)</sup>)
  -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세출예산(Division M; Coronavirus Response and Relief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021)과 의무지출법(Division N; Additional Coronavirus Response and Relief Act)의 형식으로 나뉘어 구성됨

48) CBO, 'Divisions A through L of the House Amendment to the Senate Amendment to H.R. 133,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 2020.12.21. <https://www.cbo.gov/publication/56913>

- CBO에서 발표(2021.1.14.)한 동 정책의 법안 비용 분석 보고서<sup>49)</sup>에 의하면, 코로나 대응 비용은 약 8,680억달러 규모로 집계되며, 구성은 약 1,850억달러 규모의 추정 세출예산(Division M)과 약 6,769억달러 규모의 의무지출 증가와 53억달러 규모의 세입감소분(Division N)으로 구성
- (주요 내용<sup>50)</sup>) 5차 지원책은 3차 지원책에서 포함되었던 재난지원금과 함께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및 실업수당 확대 예산 등이 다시 포함되었으며, 백신 공급 등의 신규 예산이 배정된 것이 주요한 특징임
- 5차 지원책에 포함된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의 기준 지원금액(\$1,200)대비 50% 감소한 1인당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600달러로 하향 조정됨<sup>51)</sup>
  - \* 1차 재난지원금은 성인(\$1,200)과 아동(\$500)을 구분하여 지급하였으나, 2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성인과 아동 구분 없이 1인당 600달러로 지급하도록 함
  - \* 재난지원금 수령 소득 기준은 1차 재난지원금 요건과 동일
- 실업수당<sup>52)</sup>의 경우, 2020년 8월 8일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해 확대된 실업수당(FPUC<sup>53)</sup>이 2021년 3월 14일(11주 연장)까지 다시 연장(re-authorize)되어 주당 \$300의 실업급여(\$300/week)를 받을 수 있도록 함 (행정명령 관련 내용: 19pg 참고)
  - 이와 함께, 3차 지원책에서 규정한 39주간의 별도의 대유행 실업지원(PUA)을 2021년 3월 14일(11주 연장; 39주→50주)까지 연장
  - 추가적으로, 3차 지원책에서 규정한 대유행 긴급 실업수당(PEUC) 지급을 11주 연장하면서 총 연장기간이 총 24주로 확대되었음(정책 이행: ~2021.3.14.)
    -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3차 지원책은 정규실업급여를 소진한 상태에서 특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13주를 연장하여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정책 이행:~2020.12.31.)
-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은 지난 4차 지원책에 이어 5차 지원책에서도 재차 확대 편성되었으며, 긴급경제자금융자(EIDL) 또한 대출과 보조금의 형식을 혼합하여 지원

49) CBO, 'H.R. 133, Summary Estimate for Divisions M Through FF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 Public Law 116-260', 2021.1.14., <https://www.cbo.gov/publication/56963>

50)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지출분석센터), 『2020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20.10.21. 미국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

51) 美 재무부, 'Treasury and IRS begin delivering the second round of economic impact payments to millions of Americans', 2020.12.29.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m1224>

52) CRS, 'Unemployment Insurance Provisions in the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2021.3.17.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F/IF11786>

53) 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  
Coronavirus Response and Relief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P.L. 116-260 ) 조항 참고

하던 방식에서 보조금 형태로 바뀌어 지원하도록 함

- 보건 분야에서는 코로나 진단 테스트·추적(tracing)·완화를 위해 주정부 지원금과 함께 백신 조달 및 공급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규정함

<표 5> 코로나 대응 5차 지원책 예산 내역 추정치

(단위: 억달러)

구분	예산
중소기업 지원(PPP \$2,610억, EIDL <sup>54)</sup> 선지급금 \$200억 등)	3,020
실업수당 연장(\$300/week)	1,210
재난지원금(1인당 \$600)	1,660
교육(초·중·고(K-12) 및 고등교육 보조금 등)	820
보건(코로나 진단 테스트 등 주정부 지원금, 백신 관련)	720
교통(항공사 직원 급여 지원 및 교통 인프라 보조금)	440
기타(영양 관련 지원, 임대 및 보육 지원 등)	880
조세	400
합계	9,150

자료: CRFB, What's in the Final COVID Relief Deal of 2020, 2020.12.21.

54) 5차 지원책의 EIDL 선지급금의 경우, 종업원 300인 이하, 특정 기간 동안의 경제 손실 30% 이상, 저소득층 지역사회(low-income community) 위치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1만달러 지급금 수령이 가능함

55)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지출분석센터), 「2020년 8월 1호 재정동향」, 2020.8.25.를 재구성하여 작성함

56) CRFB, <http://www.crfb.org/blogs/how-much-would-president-trumps-executive-orders-cost>

57) 'HEALS Act'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0년 7월 1호 재정동향' 참고

58)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긴급재난지원금(Disaster Relief Fund)을 활용

59) 피고용자와 같은 세율(6.2%)로 부과되는 고용자에 대한 사회보험급여세 징수는 이미 유예되고 있는 상태였음

60)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미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행정명령」 55)56)

- (배경) 상원 공화당에서 제시한 “HEALS Act<sup>57)</sup>” 정책안이 민주당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추가 정책의 일환으로 총 비용 약 1,650억달러 규모의 행정명령을 발동(2020.8.8.)함

\* HEALS Act: 보건(Health), 경제지원(Economic Assistance), 책임보호(Liability Protection), 학교(Schools) 등의 지원책이 포함된 상원 공화당이 제안한 종합 경기부양법안

실업수당 확대 예산의 경우, 지난 지원책에서 이미 승인된 재난구호기금(disaster relief fund)을 재원으로 하며, 사회보장급여세 유예를 위한 실제 예산도 약 50억 달러 정도로 행정명령의 총 비용(\$1,650억)중 실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는 약 100억달러 규모로 추산된 바 있음

- (주요 내용) ①특별 실업수당 연장 ②피고용인의 급여세 유예 ③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④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 (특별 실업수당 연장) 3차 지원책을 통해 지원한 주당 \$600의 실업급여 (\$600/week)를 \$400로 하향 조정하여 12월 6일 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연장 지급<sup>58)</sup>
    - \* 400달러중 300달러는 연방정부에서 지급, 100달러는 주정부에서 지급
  - (피고용인의 사회보장급여세 유예) 3차 지원책에서 고용주를 대상으로 유예한 사회보장급여세 징수를 피고용인까지 확대함<sup>59)</sup>
    - 즉, 연 소득 10만달러 미만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세(6.2%) 징수를 유예(2020.9.1~ 2020.12.31.)한 것임
  -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3차 지원책에서 규정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9.30~12.31)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율은 ‘0%’로 설정
  -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동 정책의 실행을 위해 재무부와 주택도시개발부 (HUD<sup>60)</sup>)는 주택소유주(임대인)와 임차인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담당

〈표 6〉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지원책 항목

(단위: 억달러)

구분	예산
특별 실업수당 연장 지급	440
사회보장급여세(피고용인) 유예(9.1~12.31.)	1,000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12.31.)	200
주택소유주 및 임차인 지원 관련 검토 및 확인 등	0
합계	1,650

출처: CRFB, How much would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s cost, 2020.8.8.

### III. 바이든 정부 정책

「들어가며」

#### ■ 코로나 상황

(단위: 명)

구분	'21.1.1.	'21.3.1.	'21.5.1	'21.7.1.
누적 확진자	20,607,750	28,689,014	32,276,869	33,516,522
	(2천만명 이상)	(3천만명 근접)	(3천만명 이상)	
일 신규 확진자	204,326	46,110	48,350	17,149
	일 신규 확진자 수는 2021년 4월 중순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			

자료: 미 질병통제센터(CDC), COVID Data Tracker (2021.7.7. 접속 기준)

#### ■ 당시 경제 상황

- (바이든 정부 출범 즈음) 바이든 정부 출범 직전에 발표(2021.1.13.)된 연준의 베이지북<sup>61)</sup>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평가도 있음
  -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확대되었고, 고용 또한 대부분 지역에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평가하고 있음
  - 미 연준의 통화정책보고서<sup>62)</sup>(2021.2.18.)에 따르면 2021년 실질성장률 4.2%, 실업률 5.0% 전망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회복 방향의 흐름을 보였음
- (최근) 연준의 베이지북<sup>63)</sup>(2021.6.2. 발표)은 4월 초~5월 하순까지 완만한 속도로 경제가 성장, 고용 수준 또한 꾸준히 완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증가하였다고 분석함
  - 미 노동부에서 발표한 주간 실업급여 청구 통계자료<sup>64)</sup>에 따르면, 2020년 6월 1주차 신규 실업급여 청구자 수는 37만 4천명으로 코로나19 발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2021년 7월 13일 접속 기준)
    - \* 2020년 5월 4주차(23~29일)의 실업급여 청구자 수는 38만 5천명(발표 당시 수치)으로 코로나19 발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한 주 만에 최저치가 재차 경신된 것임<sup>65)</sup>
    - \* 실업급여 전체 등록자 수는 5월 4주차 365만 8천명 → 6월 2주차에 355만 6천명으로 지속 감소함(2021년 7월 13일 접속 기준)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의 자료<sup>66</sup>(2021.6.4.)에 따르면, 3월 고용률 57.8% → 4월 고용률 57.9% → 5월 고용률 58.0%로 전년 5월 고용률(52.8%) 대비 회복된 모습을 보임

#### ■ 정책 기조(재정건전성 대응보다는 지출 확대 방향)

- 가장 최근에 발표(2021.5.28.)된 의무지출을 포함한 재정총량이 공개된 대통령 예산안 서문에서는 현 경제 상황에서는 주요 투자를 위한 재정여력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재정건전성 관련하여서는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언급한 수준에 그침
- 단, 지출 규모는 커졌으나 재원조달 방안이 포함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는 수그러든 측면이 있으며, 재정적자는 내년(FY2022)부터 단계적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 의무지출 등이 제외되고 재량지출 예산만 포함된 FY2022 정부 예산안이 발표(2021.4.9.)되었을 때만 해도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높았음
- 한편, 정부의 재정확대에 대한 방침은 지속된다라는 바이든 정부의 지속적인 입장에 대한 채무 증가 및 미래세대에 부담과 관련된 재정지속가능성 우려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

#### ■ 중점 투자 방향 (바이든 아젠다)

- (American Rescue Plan)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6차 지원책으로서, 지속적인 코로나19 완화 및 종합 경기부양책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바이든 아젠다의 1단계 정책(입법 완료)
- (American Jobs Plan) 인프라 지출을 통한 국가 인프라 재건을 목표로 하는 바이든 아젠다의 2단계 정책(논의 진행 중)
- (American Families Plan) 국가 전체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인적 투자에 초점을 맞춘 바이든 아젠다의 3단계 정책(논의 진행 중)
  - \* 바이든 정부는 Build Back Better의 아젠다 중에서도 가족계획을 강하고 포용적 경제로 가는 핵심 정책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의 증대와 함께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sup>67</sup>

- (FY2022 대통령 예산안) 이미 발표된 인프라 계획(American Jobs Plan)과 미국 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을 중심으로 편성된 바이든 정부의 첫 예산안 (논의 진행 중)

■ 의회 당시 상황 (대치 국면 악화, 당 의석에 따라 갈라진 표결)

- 바이든 정부가 전적으로 주도한 미국 구조계획의 경우, 공화당 의원 중 단 한 표도 받지 못한 채 양당 의석대로 분열된 표결을 보인바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이미 트럼프 정부(FY2020)에서 정규 예산안 및 코로나19에 대응한 약 6.5조달러(이 중 약 47%(3.1조달러)는 적자성 지출) 규모의 지출이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가 약 1.9조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계획 입법 이후 약 4조달러의 추가 재정지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에 공화당의 협조를 얻기까지 난관이 예상됨<sup>68)</sup>
  - \* 한편, 추가 재정지출 계획의 규모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인프라 법안에 대한 합의가 지체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상원의 민주/공화 양당으로 구성된 협상 그룹과 백악관 간에 잠정적인 합의(2021.6.24.)를 이룸
  - 다만, 협상그룹이 전체 공화당을 대변하는 그룹은 아니기에, 향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의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61) 美 연방준비제도, Beige Book - January 13, 2021, 2021.1.13.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beigebook202101.htm>

62) Fed, *Monetary Policy Report - February 2021*, 2021.2.19.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2021-02-mp-summery.htm>

63) Fed, Beige Book - June 2, 2021, 2021.6.2.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beigebook202106.htm>

64) 美 노동부, Unemployment Insurance Weekly Claims, 각 주간 자료. <https://oui.doleta.gov/unemploy/claims.asp>

65)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지출분석센터), 「2021년 6월호 재정동향」, 2021.7.1.

66) 미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Employment Situation News Release, 2021.6.4.

[https://www.bls.gov/news.release/archives/empisit\\_06042021.htm](https://www.bls.gov/news.release/archives/empisit_06042021.htm)

67) 구윤모, 「미국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 동향 및 시사점」,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 2021년 5월호』, 기획재정부, 2021.5.11.

68) CBS News, 'Biden's American Jobs Plan and American Families Plan: What's in them and where the fund will come from', 2021.5.1. <https://www.cbsnews.com/news/biden-american-jobs-families-plans/>

● **6차 지원책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H.R. 1319; P.L. 117-2) - 2021.3.11. 입법 발효

- (총 규모) 6차 지원책인 미국 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은 항목별 여러 차례의 수정 심의 끝에 3월 10일 의회를 최종 통과하였으며, 총 규모는 약 1.8~1.9조달러 수준임
- 미국 구조계획법은 ①2021년도 들어 첫 제정된 코로나19 대응 입법지원책이자 ② 바이든 정부의 첫 코로나19 대응 정책, 그리고 ③바이든 아젠다의 1단계 정책 등의 의미를 갖고 있음
  - \* 6차 지원책이 의회를 최종 통과할 시점(2020.3.10.)에는 일 확진자 수가 2021년 초 최고점 (31만명 이상)을 찍은 뒤 증감을 반복하면서 하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으로 약 6만명 수준 까지 하락한 상태였음
- CBO에서 발표(2021.3.10.)한 동 정책의 법안 비용 분석 보고서<sup>69)</sup>에 의하면, 향후 10년 (2021~2030)동안 총 정책 비용은 약 1조 8,440억달러 규모로 집계되며, 예산의 구성은 약 1조 8천억달러 규모의 의무지출 증가분과 약 460억달러 규모의 세입 감소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책 목표) 코로나19로 인해 지원이 절실한 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구제 등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의 흐름을 바꾸는(change the course of the pandemic) 한편, 경제 회복을 위한 가교 역할을 목표로 함<sup>70)</sup>
- (주요 정책<sup>71)</sup>) 미국 구조계획법은 실업수당 확대(\$300/week) 및 제3차 재난 지원금(1인당 최대 \$1,400), 그리고 각종 대규모 세액공제와 주지방정부·교육 기관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된 것이 특징으로 코로나19 완화를 주요 목표로 하였음
  - \* 한편, 동 법은 발의 당시 주요 이슈 중 하나였던 연방최저시급 인상안이 포함되어 의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최종 법안에서는 포함되지 못하였으며, 주당 실업수당(benefits/week) 규모도 하향 조정(\$400→\$300)되었음

69) CBO, 'Estimated Budgetary Effects of H.R. 1319,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As Passed by the Senate on March 6, 2021) 2021.3.10., <https://www.cbo.gov/publication/57056>

70) 미 백악관, President Biden Announces American Rescue Plan, 2021.1.20.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legislation/2021/01/20/president-biden-announces-american-rescue-plan/>

71) OECD(ecoscope blog), 'American Rescue Plan: A first package of President Biden's transformative reforms', 2021.3.26. <https://oecdecosope.blog/2021/03/26/american-rescue-plan-a-first-package-of-president-bidens-transformative-reforms/>

- 6차 지원책에 포함된 3차 재난지원금은 1차(2020.3.) 재난지원금의 1인당 최대 수령 금액(\$1,200)보다 200달러 증가한 1,400달러로 결정됨
  - 단, 3차 지원책의 재난지원금은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500달러를 추가 지급 하였으나, 6차 지원책에서는 성인과 아동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성인 기준으로 동일하게 1,400달러(부부합산 \$2,800)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 규모가 확대됨<sup>72)</sup>
- 실업수당 또한 재차 확대되었는바, 특별 실업수당(FPUC) 지급의 경우, 3차 지원책과 행정명령, 5차 지원책에 이어 6차 지원책에서도 포함되었으며, 주당 300달러 (\$300/week)로 설정한 금액을 2021년 9월 6일까지 지원기로 함
  - 이와 함께, 3차와 5차 지원책에서 규정한 대유행 긴급 실업수당(PEUC) 연장 지급을 29주 연장(2021.3.14.부터)하였음(정책 이행: 2021.9.6.까지)
  - 또한, 대유행 실업지원<sup>73)</sup>(PUA) 연장기간이 29주가 추가되어 총 79주간<sup>74)</sup>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정책 이행: 2021.9.6.까지)
- 중소기업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은 지난 정책에 비해 수혜 대상 요건을 완화<sup>75)</sup> 하였으나, 규모 측면에서는 대폭 축소되었으며, 긴급경제자금융자(EIDL)의 경우도 보조금 지급은 지속되었으나 규모 면에서는 5차 지원책 대비 소폭 축소됨
- 이 밖에 코로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항공업계 및 관련 계약업체의 고용유지를 위한 자금 지원(120억달러)이 포함되었음
- 보건 분야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진단 테스트·추적(tracing) 등을 위한 예산과 함께 백신 조달 및 공급에 대한 예산이 재차 포함됨
- 조세 분야<sup>76)</sup>의 경우, 2차 지원책에서 규정한 기업(종업원 500인 미만 사업장)지원 정책인 유급 병가 및 가정 의료휴가 비용에 대한 급여세액공제가 연장(2021년 9월 30일

72) 미 재무부, FACT SHEET: The American Rescue Plan Will Deliver Immediate Economic Relief to Families, 2021.3.18. <https://home.treasury.gov/news/featured-stories/fact-sheet-the-american-rescue-plan-will-deliver-immediate-economic-relief-to-families>

73) 자영업자, 독립 계약자, 임시직업 구직자 또는 기존에 정규실업 미혜택자 및 기타 요건에 부합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실업지원으로 3차 지원책에서 규정한 39주간의 별도의 대유행 실업지원(PUA)을 5차 지원책에서 2021년 3월 14일(11주 연장; 39주→50주)까지로 연장한 바 있음

74) 정책 이행 기간(2021.9.4.) 조항에 따라, 실제 주수는 79주 미만이 될 것으로 보임

75) 미 연방정부 관보(Federal Register), Business Loan Program Temporary Changes; Paycheck Protection Program As Amended by American Rescue Plan Act, 2021.3.22.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1/03/22/2021-05930/business-loan-program-temporary-changes-paycheck-protection-program-as-amended-by-american-rescue>

76) 미 재무부, FACT SHEET: The American Rescue Plan Will Deliver Immediate Economic Relief to Families, 2021.3.18.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Fact-Sheet-03-18-21.pdf>

까지)되었으며, 직원 고용 유지를 위한 급여세액공제(2021년 12월 31일까지)도 연장 및 확대됨

\* 2차 지원책에서 규정한 유급 병가 일수(직원 1인당 10일) 재설정(2021.4.1.부터 10일 추가)<sup>77)</sup>

- 이 외에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 근로장려세제(ETC) 규모를 1년(2021년)간 확대함

### <표 7> 코로나 대응 6차 지원책 예산 내역 추정치

(단위: 억달러)

구분	예산
재난지원금(1인당 최대 \$1,400)	4,020
주/지방정부 지원	3,620
실업수당 연장(\$300/week)	2,460
교육(초·중·고(K-12), 고등교육 기관 보조금)	1,700
아동 관련(보육 등) 지원	400
보건(코로나 진단 테스트, 백신 공급 등)	1,250
운송업계/항공 제조업계(\$30억) 등 보조금 지원	450
긴급임대료 및 주택 관련 지원	410
중소기업 지원(PPP \$72.5억 <sup>1)</sup> , EIDL 선지급금 \$150억 등)	220
레스토랑 등 음식업체 지원	150
영양 지원, 식료품 지원 등(WIC <sup>2)</sup> , SNAP <sup>3)</sup> , EBT <sup>4)</sup> 등)	120
항공사 고용유지 보조금(~9월)	120
각종 세액공제(아동세제, 근로장려세제, 고용유지 등)	1,400
기타	1,600
합계	약 \$1.8조달러

주: 1) 72.5억달러는 PPP의 예산권한(Budget Authority) 규모이며, 실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Estimated Outlays) 추정 규모는 약 38억달러 수준임

2) WIC - Women, Infants and Children(여성, 유아, 어린이 영양 지원 프로그램)

3) SNAP - Supplementary Nutrition Assistance Program(보충 영양 프로그램)

4) EBT - Electronic Benefit Transfer(학생 가정 식료품 구매 지원)

※ 6차 지원책의 예산 내역 추정치는 아래 ‘자료 1’, ‘자료 2’, ‘자료 3’을 바탕으로 추정된 규모로서 자료별 시차의 차이 등의 이유로 실제 규모와 다소 다를 수 있기에, 대략적인 예산의 구성에 대한 참고로 활용 가능

자료 1: OECD Blog, American Rescue Plan: A first package of President Biden’s transformative reforms, 2021.3.26.

자료 2: CRFB, What’s in the \$1.9 trillion house COVID Relief Bill?, 2021.2.18.

자료 3: CBO, Estimated Budgetary Effects of H.R. 1319,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As Passed by the Senate on March 6, 2021) 2021.3.10.

77) Molly F. Sherlock 외, The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ARPA; H.R. 1319) Title IX Subtitle G - Tax Provisions Related to Promoting Economic Security, CRS, 2021.3.5. <https://fas.org/sgp/crs/misc/R46680.pdf>

**<참고> 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 Extension Act of 2021**

H.R. 1799 / P.L. 117-6

- ◇ 중소기업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연장법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입법된 CARES Act(P.L. 116-136)의 PPP 조항을 수정(만료시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 당시 시행중이었던 PPP의 만료시한은 2021년 3월 31일이었으며, 동 법을 통해 PPP 만료시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음

● **American Jobs Plan<sup>78)</sup> (인프라 계획)**

(3월 31일 발표; 인프라 계획은 현재 논의 단계 중에 있는 계획안임)

- (총 규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프라 패키지의 규모 및 방법 등은 현재 (6.24. 기준) 잠정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며,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인 3월 31일에 미국 구조계획에 이은 바이든표 부양책의 2<sup>nd</sup> part인 인프라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발표 당시 총 계획 규모는 약 2.2~2.3조달러 수준으로 공개되었음
- (정책 목표) 인프라 계획은 향후 8년에 걸친 정책으로서 ①수백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②국가 인프라 재건(rebuilding), ③중국과의 경쟁 우위(out-compete) 구축 등 크게 3가지의 목표를 보이고 있음
- (주요 정책) ①운송(자동차 전기화 포함) 인프라(6,210억달러), ②병원/연방 건물/학교시설/주택 인프라 현대화(3,780억달러), ③제조업 및 R&D 인프라(5,800억달러), ④장기 요양 등 돌봄 인프라(4,000억달러), ⑤클린 수자원 인프라 재건/전력 인프라 교체/광대역 통신망 확대(3,110억달러) 등으로 구성<sup>79)</sup>
- (재원 조달 계획) 인프라 계획은 인프라 재건 등과 함께 재원조달 방안의 일환으로 법인세 개혁 방안(The Made in America Tax Plan)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를 통해 향후 15년 안에 인프라 관련 비용을 상쇄할 것으로

78) 윤성주·구윤모, 「2021 미국 인프라 세부정책 계획」,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2021.4

79) CSG(The Council of State Governments), 'Analysis for the States: The American Jobs Plan Act', 2021.4.26.

<https://web.csg.org/covid19/2021/04/26/the-american-jobs-plan-act/>

발표되었음

-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 인상을 통해 향후 15년간 2조달러 이상의 세입 확충 계획을 언급하면서 기존 21% → 28%로 인상하는 안을 제안하였음
- 글로벌 최저세(global minimum corporate tax)의 경우 다국적 기업이 이익을 조세 수준이 낮은 국가로 이동시켜 세금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다자간 협정을 통한 타 국가들의 글로벌 최저세율을 인상(10.5%<sup>80</sup><sup>81</sup>) → 21%하도록 제안할 것을 언급함

**<참고> 잠정 합의된 인프라 예산 내역<sup>82)</sup>**

- 최근 잠정 합의된 인프라 예산 내역은 ①향후 5년간 9,730억달러, ②향후 8년간 1조 2,090억달러 등 2개의 기간으로 구분됨
- 신규로 설정되는 예산 규모는 약 5,790억달러로 ①교통 인프라와 ②기타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음
  - (교통 인프라) 도로, 다리, 안전 분야, 대중교통(public transit), 철로, 전기 차 인프라, 전기 버스 등 / 공항, 항만·수로(총 규모 3,120억달러 계획)
  - (기타 인프라) 수자원 인프라, 광대역 인프라, 인프라 복원력 등(총 규모 2,660억달러 계획)

구분	내역	규모 (단위: 억달러)
교통 인프라 (총 \$3,120억)	도로/다리, 안전, 대중교통, 철로 등	2,350
	전기 차 인프라 및 전기 버스 등	150
	공항, 항만/수로 등	410
	기타	210
기타 인프라 (총 \$2,660억)	수자원 인프라	550
	광대역 인프라	650
	인프라 복원력	470
	전력 인프라	730
	기타	260

출처: 美 백악관의 Fact Sheet 자료(각주 #82 참고)를 바탕으로 재구성

80) Fortune, Everything to know about how President Biden wants to change the corporate tax code, 2021.6.7.  
<https://fortune.com/2021/06/07/biden-corporate-tax-code-changes-coming/>

81) Daniel Bunn, Two Important Issues that Must Be Resolved in “Global Tax Reform”, Tax Foundation, 2021.5.25.  
<https://taxfoundation.org/us-global-minimum-tax/>

82) 美 백악관, FACT SHEET: President Biden Announces Support for the Bipartisan Infrastructure Framework, 2021.6.24.

• **American Families Plan (미국 가족계획)<sup>83)</sup>**

(4월 28일 발표; 미국 가족계획은 현재 논의 단계 중에 있는 계획안임)

- (총 규모) 4월 28일(현지 시간)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joint session of congress)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 가족계획은 인프라 정책의 2nd part로서, 향후 10년 동안 지출 규모는 총 약 1.8조달러 수준으로 공개됨
- (정책 목표) 아동 빈곤 감축 등 자녀 세대와 가정에 대한 투자, 미국 경제와 노동자의 미래 투자를 통한 세계경쟁력 지원, 중산층 확대 등 전반적으로 모든 미국민의 경제 성장 이득 공유 확대 등의 목표를 보이고 있음<sup>84)</sup>
- (주요 정책) 미국 가족계획은 ①교육(5,060억달러), ②가정 및 아동(4,950억 달러), ③각종 세액공제 연장(8,550억달러) 등을 중심으로 가족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 3~4세 아동 무상 교육, 2년 전문제 대학교 학비 무료,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Pell Grants) 확대 등
  -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유급 가정휴가 및 병가 프로그램 도입, 여름 기간 동안의 학생 가정 식료품 지원(EBT) 확대 등
  - 미국 구조계획에서 규정한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 2025년까지 연장 및 무자녀 (childless workers)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영구화, 아동 보육·부양가족 세액공제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확대 및 영구화 등
- (재원조달 계획) 동 계획의 주요 재원조달 방법은 법인세 개혁에 초점을 맞춘 인프라 계획과는 달리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①고소득 가구 세금 인상(8,000억달러 수입 전망) ②조세격차(tax gap) 감축(7,000억 달러 수입 전망) 등을 통한 수입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83) 美 백악관, Background Press Call by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s on the American Families Plan, 2021.4.27.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s-briefings/2021/04/28/background-press-call-by-senior-administration-officials-on-the-american-families-plan/>

84) 미 백악관, Fact Sheet: The American Families Plan, 2021.4.28.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4/28/fact-sheet-the-american-families-plan/>

1.5조달러 수입을 계획함

-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7% → 39.6%) 및 가구소득 40만달러 이상을 대상으로 메디케어 세율 3.8% 일관 적용(현재는 일관성 있는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연소득 1백만 달러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자본소득세율<sup>85)</sup> 39.6%로 인상<sup>86)</sup> 등

**<참고> 2022 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sup>87)</sup>**

- (총 규모) 미국의 행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관리예산처(OMB)는 미국 가족 계획이 발표되기 전인 2021년 4월 9일에 2022 회계연도(2021.10 ~ 2022.9)의 재량지출 계획안이 담긴 대통령 예산안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5월 28일에 재량·의무지출을 모두 포함한 6조달러 규모의 예산 총량을 공개함
- (예산기조 및 편성방향<sup>88)</sup>) 현 경제상황하에서 재정여력이 있음을 언급 하면서 생산성 증대를 위한 주요 투자에 대한 계획을 필두로 한 재정 확대에 대한 흐름을 유지할 계획
  - “Build Back Better” 아젠다를 바탕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이미 발표되었던 인프라 계획과 미국 가족계획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적 예산이 편성됨
  - 한편, 장기적으로는 보건/은퇴 프로그램 관련 지출로 인한 장기적인 재정압력을 우려하면서 장기적 재정적자 감소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밝힘
- (재정 수치) FY2022 재정적자는 전년도 추정치 대비 약 50% 감소한 1조 8,370억달러(GDP대비 7.8%) 전망
  - \* FY2021 재정적자 추정치(16.7%)는 1945년(-21.0%) 이후 GDP 대비 가장 높은 수치
  - (수입) FY2022 총 수입은 전년 추정치(3조 5,810억달러) 대비 16.6% 증가한 4조 1,740억달러(GDP대비 수입 총량 수치는 전년대비 1.5%p 증가)
  - (지출) FY2022 총 지출은 전년 추정치(7조 2,940억달러) 대비 17.1% 감소한 6조 110억달러 전망(GDP대비 지출 총량 수치는 전년대비 7.3%p 감소)

85) capital income tax

86) 美 백악관, Fact Sheet: The American Families Plan, 2021.4.28.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4/28/fact-sheet-the-american-families-plan/>

- 재량지출(예산권한 기준<sup>89)</sup>) 계획 규모는 전년(1조 4,013억달러) 대비 8.4%(1,212억달러) 증가한 1조 5,225억달러이며, 보건, 복지, 고용 등 기타 분야들이 포함된 비국방 예산이 국방예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특징임<sup>90)</sup>
- \* (국방예산) FY2022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7,531억달러 계획
- \* (비국방예산) FY2022 비국방예산은 전년대비 15.8% 증가한 7,696억달러 계획

<표 8> 미국 주요 재정지표 추이 및 전망

(단위: 십억달러, GDP대비 %)

회계연도	실적		추정	전망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	2031
수입	3,464 (16.3)	3,421 (16.3)	3,581 (16.3)	4,174 (17.8)	4,641 (18.9)	4,828 (18.9)	...	6,643 (19.9)
지출	4,448 (21.0)	6,550 (31.2)	7,249 (32.9)	6,011 (25.6)	6,013 (24.5)	6,187 (24.2)	...	8,211 (24.6)
재정적자	984 (4.6)	3,129 (14.9)	3,669 (16.7)	1,837 (7.8)	1,372 (5.6)	1,359 (5.3)	...	1,568 (4.7)
연방채무	16,801 (79.2)	21,017 (100.1)	24,167 (109.7)	26,265 (111.8)	27,683 (112.7)	29,062 (113.8)	....	39,059 (117.0)

출처: OMB, FY2022 President's Budget, 2021, 5.28  
OMB, FY2021 President's Budget, 2020, 2.10

87)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지출분석센터)의 「2021년 4월호 재정동향」, 2021.5.6.의 주요 내용을 발췌함  
88)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지출분석센터), 「주요국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 『월간재정동향 및 이슈 - 2021년 6월호』, 기획재정부, 2021.6.8.  
89) OMB, FY2022 President's Budget - Table S-7. Funding Levels for Appropriated ("Discretionary") Programs by Category, 2021, 5.28.  
90) 구윤모, 「미국 바이든 정부의 재정동향 및 시사점」, 『월간재정동향 및 이슈 - 2021년 5월호』, 기획재정부, 2021.5.11

#### IV. 정책 평가 및 향후 전망

● Build Back Better 아젠다를 바탕으로 향후 단기적 지출 확대 지속

■ 이미 입법 완료된 미국 구조계획법(바이든 아젠다 1차)을 포함하여, 이후 인프라 계획(바이든 아젠다 2차)에 이어 최근 미국 가족계획(바이든 아젠다 3차)까지 발표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아젠다하에 진행되었던 1, 2, 3차 정책이 모두 공개됨

■ FY2022 대통령 예산안 데이터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의 지출은 전년대비 약 11% 증가한 GDP대비 32.9%로 전망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종전 최고 기록\*이 1년만에 재차 경신될 것으로 추정됨

\* 2020 회계연도 지출 실적 규모는 이미 2차 세계대전 이후 GDP대비 최고 기록인 31.2%를 기록함

\* 2차 세계대전 당시 지출(GDP대비) 규모: 42.6%(1943) → 42.7%(1944) → 41.0%(1945)

○ 한편, 코로나 위기 시점을 제외한 트럼프 정부 시기(2017~2019)의 재정지출 규모는 GDP대비 20%~21% 사이에서 유지되었음을 볼 수 있음

○ 바이든 정부(2022~2024)의 재정지출 규모는 코로나 위기 이전 규모보다 다소 높아진 GDP대비 24%~25% 사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재정적자 규모는 단계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세제개혁 등으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 수입 규모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표 9>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 재정지표 추이 및 전망

(단위: 십억달러, GDP대비 %)

정부	트럼프 정부				바이든 정부			
	실적				추정	전망		
회계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sup>1)</sup>	2022	2023	2024
시기	위기 전			위기	진행 중	이후 전망		
수입	3,316 (17.2)	3330 (16.3)	3,464 (16.3)	3,421 (16.3)	3,581 (16.3)	4,174 (17.8)	4,641 (18.9)	4,828 (18.9)

지출	3,982 (20.6)	4109 (20.2)	4,447 (21.0)	6,550 (31.2)	7,249 (32.9)	6,011 (25.6)	6,013 (24.5)	6,187 (24.2)
재정수지	-665 (-3.4)	-779 (-3.8)	-984 (-4.6)	-3,129 (-14.9)	-3,669 (-16.7)	-1,837 (-7.8)	-1,372 (-5.6)	-1,359 (-5.3)
연방채무	14,665 (75.9)	15,750 (77.3)	16,801 (79.2)	21,017 (100.1)	24,167 (109.7)	26,265 (111.8)	27,683 (112.7)	29,062 (113.8)

주: 2021 회계연도(2020.10.~2021.9.)의 첫 3개월은 트럼프 정부 집권 시기로서 바이든 정부의 집권 시기와 겹치는 기간이며, 트럼프 정부의 마지막 코로나19 대응 입법인 제5차 지원책이 통과됨  
출처: OMB, FY2022 President's Budget - Historical Tables(◎Table 1.2 - Summary of Receipts, Outlays, and Surpluses or Deficits(-) as Percentages of GDP: 1936-2026, ◎ Table 7.1 - Federal Debt At The End of Year: 1940-2026) 2021.5.28

- 코로나19 위기 반영 전에 발표된 CBO의 재정기준선 전망<sup>91)</sup>을 보면, 2022 회계연도의 지출은 5조 1천억달러(GDP대비 21.4%)로 전망 되었으며, 금융위기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최근 12년(2008~2019년; 금융위기 직전~코로나19 위기 직전)간의 평균 지출증가율(4.3%)을 반영해도 5조달러 수준이어야 할 예산이 전망치를 훌쩍 넘어섬

\* 1976년부터~2019년까지의 GDP대비 재정지출 평균 수치는 약 18% → 위기 단계에서 발표된 2020년 수치는 13.2%p 증가한 31.2%를 기록(실적)함<sup>92)</sup>

- 일단 현 바이든 정부는 미국 구조계획법 이후에 인프라 정책과 미국 가족계획을 바탕으로 추가 부양책 추진 및 예산안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보임
  -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 및 추가 부양책 법안 협상 과정에서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 질지, 아니면 다수당인 민주당만이 지지하는 당파적인 법안으로 통과될지에 대한 여부가 주요 관심 사항이 될 것으로 보임

## ● 재정건전성

- FY2022 대통령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전년 (GDP대비 16.7%)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긴 하나 2008 금융위기 영향권 절정 직후 연도인 2010 회계연도의 재정적자(GDP대비 8.7%)와

91)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0 to 2030, 2020.1

92)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3.

1%p 정도의 차이(GDP대비 7.8%)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미 연방채무(debt held by the public)의 경우, 올해(FY2021) 예상되는 GDP대비 채무 규모가 이미 2차 세계대전 직후 역대 최고 기록(1946년: 106.1%)를 넘어 109.7%로 전망되면서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할 것으로 추정됨
- 금융위기 발발 직전 5개년도(2003~2007)의 지출 규모는 대체적으로 GDP 대비 19%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5개년도(2013~2017)는 금융 위기 직전 지출 규모보다 1%p 상승한 GDP대비 약 20%대의 기록(실적)을 보이고 있음 <표10>
- 반면에, 코로나19 위기 직전 5개년도(2015~2019)의 지출 규모는 대체적으로 GDP 대비 20%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위기 이후 5개년도(2023~2027)는 약 4%p 상승한 24%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표11>

<표 10> 금융위기 전후 지표변화

(단위: GDP대비 %)

구분	금융위기 전 5개년도					위기 영향 시기					위기 이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회계 연도															
재정 지출	19.1	19.1	19.3	19.5	19.1	20.2	24.4	23.3	23.4	22.0	20.8	20.2	20.4	20.7	20.6
재정 수지	-3.3	-3.4	-2.5	-1.8	-1.1	-3.1	-9.8	-8.7	-8.4	-6.7	-4.1	-2.8	-2.4	-3.1	-3.4

출처: OMB, FY2022 President's Budget - Historical Tables(Table 1.2 - Summary of Receipts, Outlays, and Surpluses or Deficits(-) as Percentages of GDP: 1936-2026) 2021.5.28

- 같은 관점으로 금융위기 발발 직전 5개년도(2003~2007)의 재정적자는 하락 추세로서 GDP대비 1~3% 사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5개년도 (2013~2017)는 이보다 1%p 상승한 GDP 대비 3%를 보이고 있음 <표10>
- 반면에, 코로나19 위기 직전 5개년도(2015~2019)의 재정적자 규모는 대체적으로 GDP대비 약 3%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위기 이후 4개년도(2023~2027)는 약 2%p 상승하여 5%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표11>

<표 11> 코로나19위기 전후 지표변화

(단위: GDP대비 %)

구분	코로나19 위기 전 5개년도					위기 영향 시기 (위기 진행 중)			위기 이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회계연도	실적					추정		전망					
재정지출	20.4	20.7	20.6	20.2	21.0	31.2	32.9	25.6	24.5	24.2	24.5	24.5	24.3
재정수지	-2.4	-3.1	-3.4	-3.8	-4.6	-14.9	-16.7	-7.8	-5.6	-5.3	-5.5	-5.1	-4.6

출처: OMB, FY2022 President's Budget - Historical Tables(Table 1.2 - Summary of Receipts, Outlays, and Surpluses or Deficits(-) as Percentages of GDP: 1936-2026) 2021.5.28

- 비영리 초당파 재정연구기관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는 미국 구조계획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이미 CBO의 장기 재정전망보고서<sup>93)</sup>(2021.3.4.)를 토대로 2051년에는 현 채무의 약 2배 수준으로 증가, 재정적자의 폭발적인 증가, 주요 기금(trust fund) 고갈 전망 등을 언급하면서 현 재정상황을 우려한 바 있음<sup>94)</sup>

\* 위에 언급된 CBO의 자료는 2021년 1월 12일까지 입법된 사항들을 기준으로 분석한 수치로서, 미국 구조계획법과 인프라 계획 및 미국 가족계획, 대통령 예산안 수치는 포함이 안 됨

- 올해 회계연도(FY2021)를 끝으로 종료될 재량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재도입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지 의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 있음<sup>95)</sup>

- 2011년에 제정된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of 2011)은 당시 금융위기 대응 등으로 인해 높아진 재정적자를 2021년까지 감축하는 것이 주요 논의 사항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국방과 비국방 분야에 대해 매해 재량지출 한도를 규정함

\* 재량지출 준칙은 이후 후속 법률들을 통해 한도가 조정되고, 의무지출 삭감 기한이 연장되는 등 많은 변화를 보였음

- 따라서,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간의 대규모 재정 정책에 대한 이견<sup>96)</sup>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당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포스트-2021 회계연도

93)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3.4. - <https://www.cbo.gov/publication/56977>

94) CRFB, <https://www.crfb.org/papers/analysis-cbos-march-2021-long-term-budget-outlook>

95) CRFB, <https://www.crfb.org/papers/nations-upcoming-fiscal-challenges>

96) CRFB, *Voices Skeptical of the Size of \$1.9 Trillion COVID Relief Plan*, 2021.2.12. <https://www.crfb.org/blogs/voices-skeptical-size-19-trillion-covid-relief-plan>

재정에 대비한 새로운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음

- 지속가능이슈와 관련하여, 몇몇 법안이 상원(예. Sustainable Budget Act of 2021, S.1174)과 하원(예. Trust Act of 2021, H.R. 2575)에서 발의된 바 있음 (39페이지 참고)

## ● 재정지속가능성

- 2022 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은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 및 법인세율 조정 등 재원조달 방안을 명시함으로써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줄어든 측면이 있긴 하나, 아직 의회 심의 등이 남아 있는 계획 단계로서 향후 논의단계를 지켜봐야 함

- 또한, 재정 지속가능성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채무상환과 관련된 능력’을 의미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의 세 부담 유지나 미래세대에 채무부담 전가 없이 채무상환이 가능하다는 다차원적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율 상향 조정에 주요 초점을 맞춘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논쟁은 지속될 수 있음<sup>97)</sup>

- 이에, CBO에서 올해 상반기에 발표(2021.3.4.)한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1월 12일까지 실제 입법된 정책사항들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sup>98)</sup>[그림 1]에 의하면, 아동을 포함한 미국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계산한 1인당 채무규모는 약 66,000달러로 집계된 것을 볼 수 있음

\* 미국 구조계획은 3월 말에 통과되었기에 본 보고서 전망 범위에서는 제외됨

- 결과적으로, 2021년 출생한 세대가 30세가 될 경우 1인당 채무 규모는 약 20만달러를 조금 밑도는 수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신중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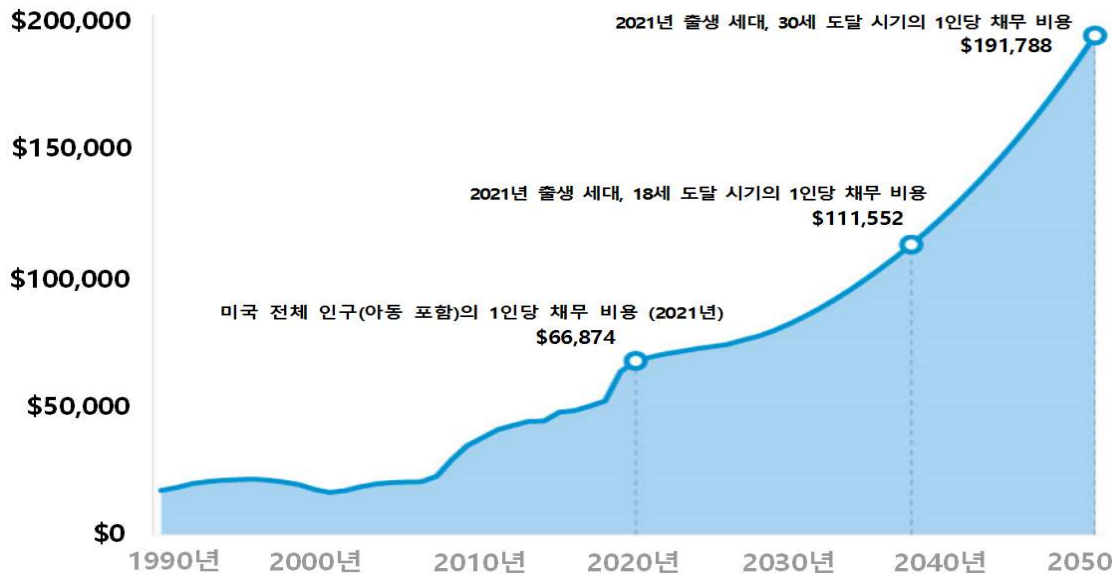
97) 한종석·최승문, 『중장기 거시재정모형을 이용한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98) Heritage, 5 Charts Show Why Congress Must Stop Adding to National Debt, 2021.5.12.

<https://www.heritage.org/debt/commentary/5-charts-show-why-congress-must-stop-adding-national-debt>

[그림 1] 미국 전체 인구 1인당 채무 규모

(단위: in 2019 dollars)



자료: Heritage, 5 charts show why Congress must stop adding to national debt, 2021.3.12

<참고> 미국 예산/채무에 대한 美 국민 설문조사 결과

-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에서 발표(2021.5.13.)한 설문조사<sup>99)</sup>에 따르면, 응답자의 75%는 국가채무가 우려되며, 높은 연방채무는 국가경제에 피해를 입힌다고 밝힘
- (채무) 응답자의 2/3는 국가채무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불공정한 유산(unfair legacy)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반면, 약 15%는 정부가 언제든지 화폐를 찍어낼 수 있기에 연방 채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함
- (투자 우선순위) 응답자의 71%는 미래에 대한 투자가 정부 예산의 우선순위 이어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79%는 도로, 다리 재건, 56%는 R&D 투자로 응답함

  - 이와 별개로, 응답자의 80%는 정부의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음을 언급
- (예산 할당) 아이/청소년(0~18세), 성인(19~64세), 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예산 할당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대체적으로 균등하게 나뉘어져 있다고 응답

  - \* 실제 연방 예산은 50% 이상이 노인층에 대한 예산이며, 15% 정도가 아이/청소년 그룹 예산으로 분류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음

- 한편, 아이/청소년 그룹 중 13~18세 응답자는 아이/청소년과 노인층에 대한 예산할당은 각각 30% 성인에게는 40%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성인 응답자는 모두에게 균등한 예산할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
- 노인 그룹은 노인층이 40%, 아이/청소년은 30% 수준으로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

(설문 진행 주관사) Ipsos(글로벌 마켓 리서치 회사)

(설문 진행 기간) 2021.4.23.~4.26

(표본) 미국 본토, 하와이 및 알래스카에 거주하는 13세 이상의 청소년 및 성인 1,110명

□ 현재 미국 연방 채무 한도(debt ceiling)는 2019 초당적 예산법(BBA of 2019<sup>100</sup>)에 의해 2021년 7월 31일까지 유예가 된 상태이기에 향후 인프라 계획 및 미국 가족계획 등 추가 부양책 합의 과정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음<sup>101</sup>)

○ 미 의회에서 7월 31일까지 채무 한도 유예기간 재설정 또는 채무 한도 규모 설정 등 채무 한도 규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8월 1일 부터는 지출(deficit spending)의 이행을 위해 몇 주 또는 수 개월간 재무부의 특별 조치(extraordinary measures)가 이행될 수 있음

○ 즉, 채무 한도에 대한 미 의회의 합의가 만료일인 7월 31일 당일까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정부는 특별 조치 재원을 활용하여 채무를 보전할 수 있음

\* 실제로, 2018년 2월 9일에 설정<sup>102</sup>)된 연방채무의 한도 유예기간(~2019.3.1.)이 지나도록 의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재무부는 2019 초당적 예산법(P.L.116-37)이 통과(2019.8.1.)되기까지 비상재원(extraordinary measures)으로 정부를 운영하였음<sup>103</sup>)

○ 따라서 채무 한도 이슈는 긴급 이슈로 바로 전환되기보다는 의회간의 합의에 있어 어느 정도 시간을 두면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99) CRFB, New Poll finds American Worry About the Debt and Want the Budget More Balanced Between Generations, 2021.5.13.

<https://www.crfb.org/blogs/new-poll-finds-americans-worry-about-debt-and-want-budget-more-balanced-between-generations>

100) Bipartisan Budget Act of 2019 - P.L. 116-137

101) CRFB, Upcoming Congressional Fiscal Policy Deadlines, 2021.6.6.

<https://www.crfb.org/blogs/upcoming-congressional-fiscal-policy-deadlines>

102) (2018.2.9.) 2018 초당적 예산법(BBA of 2018)에서 기존 연방채무 한도 유예기간 설정

103)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지출분석센터), 「2019년 8월 제1호 재정동향」, 2019.8.16.

- 다양한 대규모 부양책 입법 또는 발표로 인해 재정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속을 위한 몇몇 법안이 의회에서 발의됨
  -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공화당 상원 의원은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과 함께 지속가능예산법안(Sustainable Budget Act of 2021, S.1174)을 발의(2021.4.15.)하기도 함<sup>104)</sup>
    - 동 법안은 입법부 내에 연방예산의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재정책임 및 개혁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장기적 재정지속가능성과 중기적 재정현황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동 위원회 주된 역할은 예산균형 방안(이자지출 제외) 마련, 10년 안에 허용 가능한 수준(at an acceptable level)의 GDP대비 국가 채무 안정화, 장기재정전망(보장성 지출 및 수입 지출 차이 변화 등) 개선
  - 이외에 연방 기금(trust fund) 재정안정성 회복을 위한 하원 법안(H.R. 2575; Trust Act of 2021)이 상원에서 재발의(S.1295)가 되는 등 의회 차원의 초당파적 논의도 있는 실정임<sup>105)</sup>

#### ● 경제 영향 - 물가

- 최근의 물가상승 압력 등을 보면, 최근까지 전개된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다른 움직임이 보이면서 기존 전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연준은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지만, 단기적인 현상으로 그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이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은 실무 보고서<sup>106)</sup>를 통해 노동 부족 현상에 대한 실업 지원 확대 예산의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도 함<sup>107)</sup>

104) 루미스 상원 의원 홈페이지, Lummis Introduces Legislation to Address America's Budget Crisis, 2021.4.15.

<https://www.lummis.senate.gov/press-releases/lummis-introduces-legislation-to-address-americas-budget-crisis/>

105) CRFB, TRUST Act has Bipartisan, Bicameral Reintroduction, 2021.4.22.

<https://www.crfb.org/blogs/trust-act-has-bipartisan-bicameral-reintroduction>

106) Petrosky-Nadeau·Valletta, UI Generosity and Job Acceptance: Effects of the 2020 CARES Act - Working Paper Series,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2021.6

107) Forbes, \$300 Unemployment Benefit Has 'Small, But Noticeable' effect On Labor Shortage, Fed Paper Finds,

-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룸버그 등 몇몇 주요 언론 매체들은 인플레이션이 바이든 정부에 정치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헤리티지 재단은 이보다 더 심한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음을 경고한 바 있음<sup>108)</sup>

\* 미 노동부의 소비자가격 발표에 따르면, 2021년 4월의 재화 및 용역 가격이 전월대비 0.8%(전년 대비 4.2%)증가하였으며, 이는 약 10년 만에 최고치로 집계

- 정치계도 마찬가지로 의회 상원 금융위원회 존 쉰(John Thune) 의원은 “현재 미국 경제는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고 있음”을 언급함

- 팻 투미(Pat Toomey) 상원 은행위원회 의원은 “인플레이션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연준은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먼 문제(distant problem)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함

- 이와 함께, 미 재무부 옐렌(Yellen) 장관은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정책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는 발언까지 함으로써<sup>109)</sup>, 낮은 이자율을 배경으로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정책을 계획하였던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의 인플레이션 흐름이 장기화될 경우 현 상황을 단순 이슈로 목과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향후 후속 정책 규모 협상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주요 언론 및 연구기관 간의 찬성·반대 이슈가 팽팽히 맞서면서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존재함

● 수요 기반의 재정 투입 및 효율적 지출 방안 논의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이든 정부는 첫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대규모(1.9조달러) 지원책인 미국 구조계획을 통과시켰으며, 당시 이와 관련하여 미 지출액(unspent funding)

2021.5.24.

<https://www.forbes.com/sites/shaharziv/2021/05/24/300-unemployment-benefit-has-small-but-noticeable-effect-on-labor-shortage-fed-paper-finds/?sh=289e12445dbf>

108) Heritage, No Reason To Get Panicky About Inflation... Yet, 2021.6.11.

<https://www.heritage.org/budget-and-spending/commentary/no-reason-get-panicky-about-inflation-yet>

109) Fox Business, Inflation spike bolsters Republicans' criticism of Biden's \$4T spending plans, 2021.5.12.

<https://www.foxbusiness.com/economy/inflation-surge-republican-criticism-biden-spending-plan>

활용과 연계되어 대규모 지출 입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sup>110)</sup>

- 즉, 2021년 3월 8일 기준으로 미국 구조계획법 통과 전에 제정된 코로나19 대응 지원책 규모가 이미 약 4조달러에 달한 상태였으며, 이중 25%(약 1조달러) 이상이 미국 구조계획법(6차) 통과 당시 미 지출액으로 남아 있었던 것임
  - 미 지출액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소진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약 9천억달러 규모의 5차 지원책이 통과된 후 10주도 안된 상태에서 6차 지원책이 추진되었고, 집행 속도가 느리거나 낮은 수요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된 바 있음
    - \* 트럼프 정부에서는 2021 회계연도 정규세출예산 및 코로나 대응 지원 예산법(H.R. 133; P.L. 116-260)을 통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3차 지원책(CARES Act)의 대출 및 대출보증(연준의 대출제도 포함), 주/지방정부 보조금 예산(4,790억달러)을 철회<sup>111)</sup> (rescission)한 바 있음<sup>112)113)</sup>
    - 미 감사원(GAO)에서 공개한 긴급대출제도 평가보고서<sup>114)</sup>는 재무부 기금에 기초한 연준의 긴급대출제도 점검 결과 대출 거래액이 총 한도의 약 1%인 240억달러에 그쳤으며, 이에 대해 일부 제도의 대출 수요가 없었고 참여 제한 사항 등의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함<sup>115)</sup>
- 2021년 4월 19일에 발표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없는 정책 사업들을 다룬 CRFB<sup>116)</sup>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책 약 6조달러 규모 중 약 6,500억달러가 코로나19 대응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힘<sup>117)</sup>
- 각 정책별로 보면, 3차 지원책은 약 1,700억달러, 5차 지원책 약 1,700억달러, 그리고,

110) CRFB, 'Understanding the \$1 trillion in unspent COVID relief funding, 2021.3.10.

<https://www.crfb.org/blogs/understanding-1-trillion-unspent-covid-relief-funding>

111) 예산 철회는 연방 예산 제도에서 특별한 경우에 쓰이는 것이 아닌 자주 활용되는 연방 예산상의 도구(commonly used tool of federal budgeting)임

The Heritage Foundation, <https://www.heritage.org/sites/default/files/2021-01/IB6038.pdf>, 2021.1.19.

1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지출분석센터), 「2021년 1월호 재정동향」, 2021.2.1.

113) CBO, Estimate for Division N - Additional Coronavirus Response and Relief H.R. 133,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 2021.1.14. [https://www.cbo.gov/system/files/2021-01/PL\\_116-260\\_div\\_N.pdf](https://www.cbo.gov/system/files/2021-01/PL_116-260_div_N.pdf)

114) GAO, Federal Reserve Lending Programs: Use of CARES Act-Supported Programs Has Been Limited and Flow of Credit Has Generally Improved, 2020.12.10. <https://www.gao.gov/products/GAO-21-180>

115)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지출분석센터), 「2020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21.4.20.

116)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117) CRFB, 'COVID Bills Had \$650 Billion in Extraneous Policies, 2021.4.19., <https://www.crfb.org/papers/covid-bills-had-650-billion-extraneous-policies>

최근에 입법된 미국 구조계획은 약 3,150억달러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이 없는 자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에 지출되지 못한 정책자금들은 단계적으로 집행되겠지만, 아예 사용되지 못한 자금을 대한 이슈도 함께 제기되었던 것이며, 미 지출액을 활용하자라는 의견은 현재 인프라 법안 마련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주제로 작용하였음
- 추가적으로, 대유행으로 인한 특별 실업수당의 경우와 같이 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정책들을 포함하여 코로나19 사태로 크게 증가한 재정에 대한 효율적인 지출 방안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예) 현재 미국은 실업수당이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며, 실업수당에 의지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 채용 난을 겪는 사업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sup>118)</sup>
  - 실업수당의 경우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규 실업수당에 추가로 자금을 더하여 지급해주고, 기간의 연장에 연장을 더하면서 명목 가처분 소득이 증가<sup>119)</sup>하는 등 가계소득 보전과 소비안정 기여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sup>120)</sup>도 존재하지만, 노동력 부족 (job shortages) 현상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최근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아이오와, 미시시피, 미주리, 사우스 캐롤라이나, 몬태나 등)을 중심으로 대유행으로 인한 특별 실업지원 중단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미 노동부에 실업수당 참여를 종결하겠다는 서한을 전달함
  - 2021년 6월 23일 기준, 26개주가 미국 구조계획법에서 설정한 대유행 특별 실업수당 만료일자(9월 초) 전에 중단을 선언하였으며, 12개 주는 이미 중단함<sup>121)</sup>

118) Wall Street Journal, What does a labor Shortage Mean for Unemployment Benefits?, 2021.5.12.  
<https://www.wsj.com/articles/what-does-a-labor-shortage-mean-for-unemployment-benefits-11620824400>  
 119) 작년(2020년) 4월 대비 12개월 동안 10.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120) CRFB, 'COVID Relief Lifted Personal Income to Record Levels, 2021.5.6.  
<https://www.crfb.org/blogs/covid-relief-lifted-personal-income-record-levels>  
 121) CRFB, Over Half of States Ending Federal Unemployment Benefits Early, 2021.6.23.  
<https://www.crfb.org/blogs/over-half-states-ending-federal-unemployment-benefits-early>

● 인프라 계획 및 미국 가족계획

-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 때 실시한 “초고속 전략” (Operation Warp Speed)을 통한 백신 개발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이제는 인프라 계획과 미국 가족계획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맞춰졌던 재정 흐름을 인프라 투자 및 국가적 생산성 증대를 위한 시도를 통해 변화시키고자 함

\*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미국 구조계획을 제안할 때부터 미국 경제 강화를 목적으로 two-part plan(인프라/가족계획)을 약속한 바 있음<sup>122)</sup>

- 다만, 일자리 창출을 최고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프라 계획이 한창 큰 화두가 되던 시기에 부티지지(Buttigieg) 교통부 장관과 백악관 인사들이 언급한 인프라 정책의 일자리 창출 개수가 과장되게 발표된 것을 부티지지 장관이 인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sup>123)</sup>

- 미 경제매체인 포브스에 따르면,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인프라 계획으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 27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하였으나, 부티지지 장관 등은 언론을 통해 1,9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과장되게 언급하였고, 이를 인정하기에 이름

- 추가적으로, 바이든 아젠다의 세액공제 및 복지의 확장은 노동자들의 일할 의지를 꺾을 것이며, 그린 뉴딜 아젠다 프로그램은 결국 전기차 구매가 가능한 부유한 가족을 지원하는 결과를 보이게 될 것이라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sup>124)</sup>

- 이런 가운데, 미국 싱크탱크인 조세재단(Tax Foundation)에서 공개(2021.5.6.)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 가족계획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GDP가 0.4% 감소하고, GNP는 0.6% 하락하며, 6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음<sup>125)</sup>

122) Forbes, Biden Aims to Create Millions of Jobs With New #2 Trillion Economic Plan, 2021.3.31.<https://www.forbes.com/advisor/personal-finance/biden-american-jobs-plan/>

123) Forbes, Buttigieg Concedes That Biden’s Infrastructure Plan Will Create 2.7 Million Jobs - Not 19 Million as Falsely Claimed, 2021.4.11.  
<https://www.forbes.com/sites/jonathanponciano/2021/04/11/buttigieg-concedes-that-bidens-infrastructure-plan-will-create-27-million-jobs-not-19-million-as-falsely-claimed/>

124) David Ditch, 5 ways to understand Biden’s \$6.4 trillion Tax-and-Spend Agenda, The Heritage Foundation, <https://www.heritage.org/budget-and-spending/commentary/5-ways-understand-bidens-64-trillion-tax-and-spend-agenda>

125) Tax Foundation, Details and Analysis of Tax Proposals in President Biden’s American Families Plan, 2021.5.6.  
<https://taxfoundation.org/american-families-plan/>

- 무엇보다도, 6월 24일에 잠정 합의된 인프라 협상 결과를 보면, 협상 그룹 전체 인원(공화당 11명, 민주당 10명)이 아닌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 5명의 상원 의원만으로 구성된 잠정 합의 수준이기에, 후에 진행될 추가 합의 및 상원 심의 과정에서 통과되기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남아 있음
-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구상되었던 바이든 정부의 기존 “American Jobs Plan”에는 단순 인프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아동 보육 투자, 교육, 기타 사회복지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이 또한 향후 의회 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수 있음<sup>126)</sup>
- 바이든 아젠다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인프라 계획 등을 통한 미국의 제조업 부활, 기후 변화 대응 등을 포함하여 포괄성과 경쟁력 있는 국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존재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에, 앞으로 진행될 인프라 및 가족계획에 대한 의회의 논의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sup>127)</sup>

126) The New York Times, Biden Agrees to Bipartisan Group’s Infrastructure Plan, Saying ‘We Have a Deal’, 2021.7.9.  
<https://www.nytimes.com/live/2021/06/24/us/joe-biden-news>

127) Brookings Institution, Biden’s infrastructure plan replaces federal cynicism with a sweeping vision, 2021.4.9.  
<https://www.brookings.edu/blog/the-avenue/2021/04/09/bidens-infrastructure-plan-replaces-federal-cynicism-with-a-sweeping-vision/>

**<참고> 인프라 계획의 비용 규모 변화**

- ◇ 바이든은 공화당에게 5월까지 인프라 계획에 대한 공화당의 자체 안을 제안한 후<sup>128)</sup> 2021.6.7.까지 인프라 계획 규모 등에 대한 백악관과 공화당 협상 대표자인 캐피토(Shelley Moore Capito) 상원 의원 간의 협상이 진행된 바 있으나, 6월 8일 양측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밝히며 협상 종결을 선언함
- ◇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초당파 의원으로 구성(공화당 11명/민주당 10명)된 새 협상 그룹과 협상을 재개함
  - \* 한편,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민주당 다수당 대표는 7월 중에 인프라 법안을 완료할 것으로 언급
- ◇ 상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프라 계획 표결을 위해 한 표가 중요한 상황에서 민주당 중도 의원 조 맨친(Joe Manchin) 의원은 무리한 법 추진을 경고하면서 양당의 초당적 합의를 요구한 바 있기에<sup>129)</sup>, 새 그룹과의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상원의 의회 심의과정에서 필리버스트(filibuster)를 피할 수 있게 됨<sup>130)</sup>
- ◇ 백악관은 6월 24일 새 협상 그룹과 인프라 계획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발표(합의 시 인원은 초기 결성된 바와는 달리 공화당 5명, 민주당 5명으로 구성<sup>131)</sup>)
- ※ 한편,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기존의 입장과 같이 법인세율 인상, 고소득자 세율 조정, 글로벌 최저세 부과 등을 통한 재원조달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인프라 이용자 수수료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배정된 자금 중 미집행 금액을 사용하자는 입장을 보인바 있음

「인프라 계획 협상 진행 주요 일지」

날짜	주요 내용	제안 규모
3.31.	바이든 대통령, 인프라 패키지 발표	\$2.2~2.3조
4.22. <sup>132)</sup>	공화당, 인프라 패키지 수정안(기간: 5년) 제안	\$5,680억
5.21. <sup>133)</sup>	바이든 대통령, 조정안 제안	\$1.7조
5.27. <sup>134)</sup>	공화당, 인프라 패키지 2차 수정안 전달	\$9,280억
6.2. <sup>135)</sup>	바이든 대통령, 인프라 패키지에서 언급한 법인세율 인상 계획이 아닌 글로벌 최저한세 세율 조정 가능성 시사 * 현 법인세율은 2017년 말에 ATJ법(American Tax Cuts and Jobs Act)에서 규정한 21%로 설정되어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계획을 통해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함 * 글로벌 최저한세 세율은 현 10.5% → 21% 인상 발표	글로벌 최저한세 21% → 15%

6.8. <sup>136)</sup>	공화당 협상 대표자(캐피토 의원)와 바이든 대통령 협상 실패 선언	-
6.16~ <sup>137)</sup>	협상 실패 후, 의회의 새로운 협상 대표자 그룹과 협상 진행 * 협상 대표자 그룹은 상원 초당파 의원 21명으로 구성	약 \$1조 추정
6.24. <sup>138)</sup>	백악관/민주당/공화당 인프라 투자예산 잠정 합의	\$9,730억 (기간: 5년) \$1조 2,090억 (기간: 8년)

- 128) POLITICO, Senate Democrats reject Republican infrastructure bid, 2021.4.21.  
<https://www.politico.com/news/2021/04/21/senate-democrats-republican-infrastructure-484035>
- 129) New York Times, Biden Meets With Capito as Deadline for Infrastructure Deal Looms, 2021.6.2.  
<https://www.nytimes.com/2021/06/02/us/politics/biden-capito-infrastructure.html>
- 130) AP News, Bipartisan infrastructure group swells to 21 senators, 2021.6.17.  
<https://apnews.com/article/joe-biden-lifestyle-business-government-and-politics-494f67f3014ec5d1361ebf27646f8340>
- 131) <https://www.nytimes.com/live/2021/06/10/us/politics-new>
- 132) Capito 상원의원 홈페이지,  
<https://www.capito.senate.gov/news/in-the-news/capito-explains-gop-infrastructure-plan-on-the-table-568b-compared-to-bidens-23t-american-jobs-plan>
- 133) NPR, Biden lowers the price of the infrastructure plan, but differences with the GOP remain, 2021.5.21.  
<https://www.npr.org/2021/05/21/999259452/biden-offers-lower-infrastructure-spending-plan-but-remains-far-apart-from-gop>
- 134) News Week, GOP Sen. Shelley Moore Capito Defends Biden's Efforts at Bipartisanship: "We Can Work Together" 2021.5.30.  
<https://www.newsweek.com/gop-sen-shelley-moore-capito-defends-bidens-efforts-bipartisanship-we-can-work-together-1596227>
- 135) NPR, Biden Says Sen. Capito's Latest Offer on Infrastructure Is Insufficient, 2021.6.4.  
<https://www.npr.org/2021/06/04/1003076656/biden-and-sen-capito-try-again-to-bridge-their-infrastructure-divide>
- 136) New York Post, Biden breaks off \$1.7T infrastructure talks with GOP negotiator Capito, 2021.6.8.  
<https://nypost.com/2021/06/08/top-gop-negotiator-capito-biden-broke-off-infrastructure-talks/>
- 137) NBC News, 11 GOP senators back infrastructure deal as Democrats plot two-track approach to passage, 2021.6.16.  
<https://www.nbcnews.com/politics/politics-news/11-gop-senators-back-infrastructure-deal-democrats-plot-two-track-n1271085>
- 138) 美 백악관, FACT SHEET: President Biden Announces Support for the Bipartisan Infrastructure Framework, 2021.6.24.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6/24/fact-sheet-president-biden-announces-support-for-the-bipartisan-infrastructure-framework/>

## V. 미국 금융위기 부양정책과 코로나19 대응 정책 비교

◇ 본 파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역대 최고 수준의 미국의 양대 경제위기로 볼 수 있는 2008 금융위기와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경제위기의 입법 지원책을 기준으로 비교점을 살펴보고자 함

### 1. 위기 원인

#### • [2008 금융위기]

- 2007년 2월경 HSBC가 2006년 모기지 사업 관련 손실 규모(105.6억달러)를 발표한 이후 대두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우려를 시작으로 이후 주택담보 대출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상품 가격 폭락 및 대출 회수 불능으로 대규모 투자은행들이 도산으로 이어짐<sup>139)</sup>

#### • [코로나19 경제위기]

-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외출 자제령 등의 방역 대책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경제 외적인 요소가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미 노동 통계 데이터 최초 기록(1967년) 연도 이래 역대급 실업자(2020년 5월 1주차 최고치: 2,491만 2천명, 수정)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짐<sup>140)</sup>

\* 금융위기 기간 월 실업자 최고치는 1,535만 2천명(2009년 10월)으로 기록되고 있음

### 2. 위기별 주요 정책 및 규모

#### • [2008 금융위기]

139) 신후식·신동진 외,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정책대응』, 국회예산정책처, 2009.4.6. (63pg)

140) 미 노동 통계국, Labor Force Statistics (Table A-1. Employment status of the civilian population by sex and age (접속: 2021.6.30.))

■ 위기 대응 주요 3대 입법지원책 규모 약 1조 6천억달러<sup>141)</sup>

\* 총 규모는 발표 당시 규모 기준이며, 정책별 재정 규모는 금융위기 대응 주요 3대 재정 수반 입법 정책을 기준으로 한 수치(CBO의 법안비용 보고서 기준)로서, 2010년말에 통과된 감세연장법 및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2010(H.R. 4173 / P.L. 111-203, 2010.7.21. 입법) 및 연준의 기타 특별 유동성 지원책 등은 포함되지 않음

○ ① 2007년 6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본격화 시점 후 약 8개월만인 2008년 2월 13일 경기침체상황 개선을 목표로 내수 진작 및 기업투자 촉진 등을 위한 첫 경기 부양법<sup>142)</sup>(Economic Stimulus Act of 2008, ESA)이 제정되었음

• 정책 규모<sup>143)</sup>는 1,240억달러로 2008년 GDP대비 0.8%

○ ② 첫 경기 부양책 이후 다시 8개월만인 2008년 10월 3일 첫 경기부양책의 정책 효과가 한계(금융시스템 유동성 불안 등)에 직면하자 부실자산 매입(TARP)에 초점을 맞춘 두 번째 긴급경제안정화법<sup>144)</sup>(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EESA)이 제정됨<sup>145)</sup>

• 정책 규모<sup>146)</sup>는 최대 7,000억달러<sup>147)</sup>로 2008년 GDP대비 4.8%

\* 후에 이 수치(\$7,000억)는 2010년 7월 21일에 제정된 도드 -프랭크 금융개혁법에서 4,750억달러(GDP대비 3.2%)로 하향 조정됨<sup>148)</sup>

○ ③ 2회의 대규모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 및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2차 지원책이 입법된 지 4개월만인 2009년 2월 13일에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sup>149)</sup>

141) 총 규모는 발표 당시 규모 기준이며, 정책별 재정 규모는 언급된 바와 같이 CBO의 법안비용 보고서 기준, 그리고 금융위기 대응 주요 3대 재정 수반 입법 정책을 기준으로 한 수치로서, 2010년말에 통과된 감세연장법 및 도드 -프랭크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2010(H.R. 4173 / P.L. 111-203, 2010.7.21. 입법) 및 연준의 유동성 지원책 등은 포함되지 않음

142) H.R. 5140 (P.L. 110-185)

143) CBO, H.R. 5140, Economic Stimulus Act of 2008 - Cost Estimate, 2008.2.11.  
<https://www.cbo.gov/sites/default/files/110th-congress-2007-2008/costestimate/hr5140pgo0.pdf>

144) H.R. 1424 (P.L. 110-343)

145) 이후, 미국 재무부는 2009년 2월 10일에 금융안정화계획(Financial Stability Plan)을 발표하였으며, 동 계획을 통해 2008년 10월 3일 제정된 부실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수정함

<참고> 미 재무부, Secretary Geithner Introduces Financial Stability Plan, 2009.2.10.  
<https://www.treasury.gov/press-center/press-releases/pages/tg18.aspx>

146) CBO, CBO's Analysis of Dodd Substitute Amendment for H.R. 1424, 2008.10.1.  
<https://www.cbo.gov/sites/default/files/110th-congress-2007-2008/costestimate/09-28-honorablefrank00.pdf>

147) 7,000억달러는 부실자산 매입을 위한 자금으로 이중 2,500억달러는 법의 통과와 함께 바로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

148) 美 재무부, Troubled Assets Relief Program(TARP), <https://home.treasury.gov/data/troubled-assets-relief-program>

149) H.R. 1 (P.L. 111-5)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ARRA)이 의회를 통과함(대통령  
법안 서명: 2009년 2월 17일)

- 정책 규모<sup>155)</sup>는 7,872억달러로 2009년 GDP대비 5.4%

#### < 참고 >

- ◇ 3개의 대규모 정책 이후, 경기부양 지속 차원에서 2010년 12월 16일에 감세연장법<sup>150)</sup>  
(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 of 2010)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다음날 대통령의 서명(2010.12.17.)으로 입법 발효됨  
- 정책 규모<sup>151)</sup>는 8,578억달러로 2010년 GDP대비 5.7%
- ◇ 2010년 들어 경제성장률이 2009년 마이너스 성장률(-2.6%)에서 플러스 성장률  
(2.7%)로 전환되는 전망 수치를 보였으나<sup>152)</sup>,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높게 전망되는  
가운데에 지속적인 경제성장 마련 차원에서 ARRA법 대부분의 조항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감세연장 중심의 입법정책<sup>153)</sup>을 실시함  
- 실업률 추이: (2008) 5.8% → (2009) 9.3% → (2010) 9.6%<sup>154)</sup>

### • [코로나19 경제위기]

■ 총 정책 규모 약 5조 8천억달러<sup>156)</sup><sup>157)</sup>(GDP대비 약 28%)

- 앞 부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트럼프 정부시기에 입법된 재정지원책은 총 5회<sup>158)</sup>  
(지원책 규모 약 4조달러, GDP대비 약 19%)이며, 바이든 정부에서 입법된 미국 구조  
계획은 약 1.8~1.9조달러 (총 6회, 2021년 7월 초 기준)

150) H.R. 4853 (P.L. 111-312)

151) CBO, CBO Estimate of Changes in Revenues and Direct Spending for S.A. 4753, an amendment to H.R. 4853,  
the 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 of 2010, 2010.12.10.  
<https://www.cbo.gov/sites/default/files/111th-congress-2009-2010/costestimate/sa47530.pdf>

152) OMB, FY2011 Budget of the U.S. Government - Table S-13, 2010.2.1.

OMB, FY2012 Budget of the U.S. Government - Table S-13, 2011.2.14.

153) 예) 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 of 2010

154) CBO, 10-Year Economic Projections, 2021.7.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

155) CBO, H.R. 1,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 Cost Estimate, 2009.2.13.

<https://www.cbo.gov/sites/default/files/111th-congress-2009-2010/costestimate/hr1conference0.pdf>

156) IMF, Fiscal Monitor: Database of Country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2021.4. 자료 기준

157) 연준의 긴급대출제도(facility) 규모(4,540억달러)를 제외할 경우, 약 5조 3천억달러 수준 → 실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의 재정 규모는 명시된 수치보다 낮아질 수 있음

158) 행정명령 포함 시 총 6회

### 3. 주요 정책 대응 목표 및 분야

#### • [2008 금융위기]

- 정책 초반에는 개인에 대한 세금 환급, 기업투자 유인을 위한 세제조치, 주택 시장안정을 위한 용자한도 상향조정 등 개인과 기업의 부담을 더는 한편, 금융위기의 원인이었던 주택분야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음
- 이후 정책에서는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TARP,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을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의 유동성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음
- 2차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가 심화되면서 입법된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 (ARRA)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 등 단기적 플랜과 함께 장기적인 경제 이익을 주는 인프라 투자 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분야의 종합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음
  - \* 재원배분<sup>159)</sup>: 세출예산(\$3,080억), 감세(\$2,810억), 주/지방정부 지원(\$1,500억)

#### • [코로나19 경제위기]

- 현재까지 의회를 통과한 6차 지원책 중 정책 초반인 1~2차에 위기 원인인 보건 관련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됨
- 이후 3차 지원책에서 대출 및 대출보증 등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아우르는 기업 지원정책 및 실업수당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개인·가구 지원 지출 정책과 더불어 교육/주지방정부 지원, 개인 및 기업 세금 감면 정책 등 코로나 19 대응 최대 규모의 종합경기부양책을 시행함
- 4차는 보건 분야와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5차에서는 다시 재난지원금과 실업수당 확대 등 개인·가구 지원 정책과 교육 지원, 그리고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항공 관련 고용유지를 위한 보조금 등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됨
- 6차는 실업수당 재확대 및 제3차 재난지원금 등의 가구 지원과 함께 각종 대규모 세제 정책을 중심으로 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음

159) 신후식·신동진 외,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정책대응』, 국회예산정책처, 2009.4.6. (22pg)

<표 12> 금융위기 / 코로나19 위기 대응 정책 주요 사항 비교

구분	금융위기 정책	코로나19 정책
위기 원인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대규모 투자은행 도산	·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위험으로 인한 경제활동 제한 → 고용 등을 중심으로 경제에 상당한 비용 발생
주요 입법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경기부양법 Economic Stimulus Act of 2008</li> <li>· ② 긴급경제안정화법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li> <li>· ③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 코로나 첫 추경 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020</li> <li>· 2차 - 가족우선코로나대응법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li> <li>· 3차 - CARES Act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li> <li>· 4차 - 급여보호프로그램 및 보건증대법 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 and Health Care Enhancement Act</li> <li>· 5차 - 코로나 완화 및 대응법 Coronavirus Response and Relief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li> <li>· 6차 - 미국 구조계획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li> </ul>
정책 기간	· 단기(1~3년) 중심	· 단기(1~2년) 중심
정책 주요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시장 안정</li> <li>· 경제 회복(recover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염 차단 및 고용유지</li> <li>· 경제 재개(reopening)</li> </ul>
주요 대응 분야	· 금융관련 업계 중심 지원	· 보건기관을 중심으로 항공업 및 중소기업 지원
위기 초반기 정책	· 내수 진작 및 신용 경색 완화	· 보건 및 바이러스 퇴치 집중
위기 하반기 정책	· 감세 연장을 통한 경기 부양 지속 추진	· 물적 인프라 및 인적 인프라를 통한 국가 기반시설 재건 및 생산성 증대 계획(현재 논의 단계 中)

주요 공통점	재난지원금 지급 및 유동성 지원을 위한 연준 긴급대출제도(facility)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2회에 걸쳐 재난지원금 지급<sup>160)</sup></li> <li>- 성인 1인당 지급 기준 규모: \$600(2008년) → \$250(2009년)</li> <li>* 경기부양법<sup>161)</sup>에서 재난지원금 성인 1인당 600달러 지급<sup>162)</sup></li> <li>* ARRA에서 특정인(사회보장수령자, 보충소득보장수령자, 재향군인 수당 및 연금 수령자, 국립철도퇴직연금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250달러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3회에 걸쳐 재난지원금 지급</li> <li>- 성인 1인당 지급 기준 규모: \$1,200(3차) → \$600(5차) → \$1,400(6차)</li> </ul>

160) Gene Falk, COVID-19 and Direct Payments to Individuals: Historical Precedents, CRS, 2020.3.19.

<https://fas.org/sgp/crs/misc/IN11256.pdf>

161) Economic Stimulus Act of 2008(P.L. 110-185)

162) Tax Policy Center, What did the 2008~10 tax stimulus acts do?

<https://www.taxpolicycenter.org/briefing-book/what-did-2008-10-tax-stimulus-acts-do>